

제 55 회

한반도 미래비전과 동북아 평화구축

전문가 정책포럼

동북아 안보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Institute for Korean Peninsula Future Strategies

목 차

포럼 일정 및 참석자 명단.....	3
발표문.....	4
지정 토론자 토론문.....	24
참석자 프로필.....	41

포럼일정 및 참석자 명단

2:30-2:50 환영 다과회

2:50-3:00 환영사 (서인택 회장, GPF Korea)

3:00-6:15 주제: 동북아 안보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발표자: 이상수 박사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기획 진행. 사회: 곽태환 박사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 통일연구원 원장)

지정 토론자 (가나다 순)

1. 강석승 박사 ((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2. 박종수 박사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3. 이상환 박사(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4. 조성렬 박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5. 최용환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 부원장)
6. 홍현익 박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전 국립외교원 원장)

GPF Korea참석자: 김한솔 사무국장, 기성훈 팀장

6:30-8:30 참석자 만찬

제55회 전문가 정책포럼 발표문(2026년 6월20일)

동북아 안보 체제의 구조적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이상수 박사
(제주 평화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초록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동북아 안보 질서에 단순한 정책 전환의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structural shock)을 가하고 있다. 본고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점진적 침식, 미·중 패권 경쟁의 질적 심화, 그리고 북·러 군사 협력의 제도화라는 세 가지 거시적 변동이 한반도에 복합적으로 투영되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론적 틀로서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세적 현실주의가 시사하는 구조적 압력과 코헤인(Robert Keohane) 및 나이(Joseph Nye)의 복합 상호의존론이 포착하는 비군사적 연계성을 결합하되, 양 이론 간의 내재적 긴장 관계를 방법론적으로 명시한다. 특히 쿠이크(Cheng-Chwee Kuik)의 헤징(hedging) 유형론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부합하도록 변형·적용함으로써, 기존의 소극적 헤징을 탈피하여 능동적 다층 헤징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증한다. 결론에 이르러 본 연구는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 독자적 재래식 억제 역량의 단계적 확충, 소다자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장, 그리고 실용적 군비 통제 접근의 병행이라는 4축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주제어: 동북아 안보, 트럼프 2기, 복합 위기, 헤징 전략, 확장억제, 한미동맹, 북러 조약

제1장. 서론

2026년 대만 해협은 지정학적 발화점으로 부상하였다.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가 대만 위기를 '일본 유사시'로 공식 규정하며 안보 연계성을 선언하자, 중국은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반발을 촉발했다. 여기에 미국의 이란 공습이라는 변수가 가중되며 국제 유가는 통제 불능의 상태로 치솟았다. 미국의 군사적 하중이 증동으로 급격히 경도됨에 따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는 전략적 전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이 틈을 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 변경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지정학적 관성은 때로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무너진다. 2026년 5월 14-15일 미-중정상회담에서 양측 정상은 서로 상이한 견해를 교환하면서 신뢰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경쟁 등에 있어서 구조적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특히 한반도 문제는 북한도발 억제와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 그리고 위기관리채널 측면에서는 미중 양측의 향후 협력가능성이 노정된다.¹

2026년 대만 해협의 파고 위에서 일본 다카이치 행정부가 보여준 행보는 그간의 '소극적 평화주의'에 종언을 고하는 선언과도 같다. 일본이 대만 위기를 자국 유사시로 공식화하고, 필리핀과의 발리카탄 연합훈련에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비밀스러운 야심이 아니다. 그것은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패권 질서 속에서 공세적 주역이 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다. 평화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살상 무기 수출 승인은 일본의 방위 산업을 거대한 수출 엔진으로 탈바꿈시켰다. 이제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수사(Rhetoric)를 넘어 실제적인 물리력과 자본의 결합으로 진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미국의 전략적 공백과 트럼프식 거래주의라는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¹곽태환, "2026 베이징 미중정상 회담: 성과평가와 동북아 안보의 미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 (검색일: 2026. 5. 17)

영킨 실타래를 푸는 주권적 자율성의 시험대 위에서, 한국은 이제 일본의 재무장이라는 거대한 변수를 방정식의 상수로 받아들여야만 한다.

북한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기회를 포착해 러시아와 군사적 혈맹을 복원하며 대한반도 영향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다. 러시아발 첨단 군사 기술과 자원이 북한으로 유입되면서 국제사회의 '비핵화' 목표는 사실상 임계점을 넘어 과기된 상태나 다름없다. 이처럼 중첩된 위기 속에서 한반도 안보의 전례 없는 고차방정식의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거래적 가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등장은 한미 동맹의 기존 관성을 재검토하고, 한국이 전략적 자율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제로서 작용하고 있다.

2026년 현재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복잡한 구조적 전환기를 통과하고 있다. 물론 이 지역이 지정학적 긴장과 무관했던 시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현 상황이 과거와 질적으로 궤를 달리하는 이유는, 다수의 위기 요인이 개별적으로 전개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호 강화되는 방식으로 밀접하게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 투즈(Adam Tooze)가 '복합 위기(Polycrisis)'라 명명한 이 상태는 단순히 위기가 중첩되는 현상을 넘어, 각 요소가 타 요소의 위험을 증폭시키는 피드백 구조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유용성을 지닌다.² 다만 투즈의 개념이 주로 세계 경제 시스템에 착안하여 도출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를 동북아 안보 영역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이론적 재구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합 위기를 군사·경제·기술적 위기의 단순한 산술적 결합이 아니라, 해당 변수들이 한반도라는 특정한 지정학적 공간에서 수렴하며 발생하는 전략적 불예측성의 질적 증대로 정의한다.

이 복합 위기의 기저에는 세 개의 거시적 단층선이 자리한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 이후 동북아 안정의 근간이었던 미국 주도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안보 구조는 이제 내부로부터의 붕괴 조짐을 보인다. 미·중 전략 경쟁은 단순히 무역 마찰이나 외교적 공방의 차원을 넘어 기술 패권, 이념적 대립, 그리고 치열한 군비 경쟁으로 확대된 상태다. 여기에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분기점을 지나며 북·러 관계가 기존의 수사적 연대를 탈피해 실질적인 군사 동맹 수준으로 이행했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이 세 단층선은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접점에서 교차할 때 발생하는 충격파는 상당하다.

2025년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에 불확실성이라는 기쁨을 부었다. 거래주의(transactionalism)를 외교의 철칙으로 삼는 이들이 동맹의 가치를 공유된 신념이 아닌 즉각적인 손익계산서로 환원할 때, 한국이 반세기 넘게 의지해 온 안보 자산의 신뢰성은 근본적으로 흔들린다. 특히 2026년 발표된 미국의 국가국방전략(NDS 2026)이 명시한 '조건부 동맹' 개념과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넘어선 실존적 위협이다.³

위성락 전 외교부 본부장은 최근 한미동맹의 결속력에 균열이 발생했음을 시사하는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놓았다. 특히 미국 측이 기존에 한국에 제공해 오던 전략적 위성 정보 공유를 전격 중단한 조치는 이러한 동맹 내 이상 기류를 가시화하는 결정적 단초로

²Adam Tooze, "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 *Financial Times*, October 28, 2022, <https://www.ft.com/content/498398e7-11b1-494b-9cd3-6d669dc3de33>.(검색일: 2022. 10. 28)

³곽태환, "조건부 동맹의 시대: NDS 2026이후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과 전략적 함의," *통일뉴스* "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1>" (검색일: 2026.2.1)

작용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압박하는 고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할 만한 재정적·정치적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이다. 결국 방위비 협상의 난항이 지속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동맹의 물리적 축소, 즉 주한미군의 일정 수준 감축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외교적 기회비용으로 감수해야 하는 실존적 선택지에 직면해 있다. 확장억제라는 우산은 폭풍우 속에서도 정말 펼쳐질 것인가? 만약 그 우산의 살이 구조적으로 부러져 있다면, 한국은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⁴

본 연구는 세 가지 핵심적 분석 질문을 축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첫째, 미·중 전략 경쟁의 가속화가 한반도의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를 어떤 방식으로 구조화하는가. 둘째, 2024년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동북아의 세력 균형 및 한·미 확장억제 태세에 미치는 실질적 함의는 무엇인가. 셋째, 이와 같은 복합적 제약 하에서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도출 가능한 최적의 헤징(hedging) 전략 조합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 연구 5편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본고가 채택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의 타당성과 여타 연구와의 차별성을 규명한다. 제3장에서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다극화와 블록화 현상을 군비 경쟁 및 경제 안보·공급망 지정학의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북·러 군사 협력의 전략적 함의와 그것이 한반도의 미래 지형에 투영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고찰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객관적이며 실현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는다.

제2장. 기존 연구 검토

동북아 안보와 한반도 전략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실로 방대하나, 냉정히 살펴보면 몇 가지 분석적 한계를 노출한다. 주제별 검토를 통해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빅터 차(Victor Cha)는 한·미 동맹의 변천을 제도적·역사적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조망한다.⁵ 그는 동맹을 단순한 안보 공급 계약을 넘어 전략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정치 공동체'로 규정하며, 이를 동맹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상수로 간주한다. 탈냉전기 동맹 관리의 논법으로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처럼 동맹의 공동체적 속성 자체를 매몰차게 부정하는 정권이 등장했을 때, 그 제도적 관성이 거래주의적 압박을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은 미비하다.

엘브릿지 콜비(Elbridge Colby)의 논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중에서도 타이완 방어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논리를 일관되게 전개한다.⁶ 한반도와 타이완 사이의 자원 배분 갈등을 정면으로 응시한다는 점에서는 선구적이나, 이는 철저히 미국의 시각에서 서술된 전략 우선순위일 뿐이다. 그 재배분의

⁴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6), 14-22; Tom Karako, "Golden Dome and the Future of Homeland Missile Defense,"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https://www.csis.org/topics/golden-dome-america> (검색일: 2025. 6.4)

⁵ Victor D. Cha, *Powerplay: The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1-30; Victor D. Cha, "The 'Alignment' Paradox: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6, no. 5 (2023): 891-915.

⁶ Elbridge A. Colby,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157-199.

과고가 한국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이를 어떻게 제어하고 어떤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쑥 빠져 있다.

쿠이크(Cheng-Chwee Kuik)의 헤징 이론은 강대국 틈바구니에 낀 중견국들의 생존 전략을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⁷ 수익 다원화와 위험 분산으로 헤징을 개념화한 틀은 한국 사례에도 유효해 보이나, 태생적 한계가 명확하다. 동남아 소국들의 대중국 접근을 모델링한 탓에, 한국처럼 강력한 공식 동맹을 지닌 국가의 특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공식 동맹이 헤징의 제약인 동시에 강력한 자산으로 작동하는 그 미묘한 이중성을 포착하기엔 역부족이다.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와 대런립슨(Darren Lipson)의 협동 연구는 핵 확산의 도미노 현상을 짚으며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을 꽤나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부한다.⁸ 감정적 호소에 매몰되지 않은 분석적 엄밀함은 돋보이나, 미국의 세계전략인 비확산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에서는 침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패럴과 뉴먼(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은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가 간 강압의 도구로 변모한 '무기화된 상호의존'을 날카롭게 파헤친다.⁹ 공급망 지정학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이지만, 이 역시 강대국의 행동 반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한국 같은 중견국이 자국의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존하고 역이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토대는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의 변증법적 결합에 있다. 다만 이러한 접근이 이론적 엄밀성을 결여한 무비판적 절충주의가 아님을 우선 명확히 하고자 한다.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의 공세적 현실주의는 국제 체제의 무정부적 특성이 국가들로 하여금 권력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강제하며, 결과적으로 패권 경쟁은 구조적 필연성을 지닌다고 상정한다.¹⁰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공세적 대응과 이러한 경쟁이 역내 중견국들에 편승(bandwagoning) 혹은 균형(balancing)이라는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작금의 구조는 이 이론의 핵심 기제와 정확히 부합한다. 그러나 공세적 현실주의는 중견국이 두 패권국 사이에서 자율성을 보존하기 위해 구사하는 고도의 전략적 기동을 설명하기에는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 이 이론은 강대국의 행동 논리를 분석의 중심에 두기에, 경제적 상호의존이나 다자 제도가 행위자의 선택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

⁷Cheng-Chwee Kuik,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 no. 2 (2008): 159-185; Kuik, "Hedging in Post-Pandemic Asia: What, How, and Why?," *The Pacific Review* 34, no. 6 (2021): 1-20.

⁸ Jennifer Lind and Darren G. Lipson, "South Korea's Nuclear Options: Proliferation Risks and Alliance Stability," *International Security* 49, no. 2 (Fall 2024): 7-51.

⁹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no. 1 (Summer 2019): 42-79.

¹⁰ John J. Mearsheimer,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 (New York: Norton, 2014), 29-54; John J. Mearsheimer,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100, no. 6 (2021): 48-58.

이러한 분석적 공백은 코헤인(Robert Keohane)과 나이(Joseph Nye)의 복합 상호의존론을 통해 보완될 수 있다.¹¹ 이 이론은 군사력이 유일한 정책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층적 채널을 통해 형성된 상호의존 관계가 행위자의 행동반경을 확장하거나 때로는 예기치 못한 제약으로 작용함을 역설한다. 군사·안보 영역에서는 미국에 경도되어 있으면서도 경제 영역에서는 중국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한국의 복층적 구조는, 이 이론적 프리즘을 통해서만 그 실체를 온전히 투영할 수 있다.

구조적 강압성을 역설하는 현실주의와 제도적 가용성을 신봉하는 자유주의. 이 두 이론의 결합에서 파생되는 내재적 긴장은 이론적 결합이라기보다, 한국이 마주한 전략적 딜레마의 실제적 본질을 관통하는 지점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충돌을 인위적으로 봉합하지 않고 그 긴장 자체를 한반도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분석적 도구로 활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한국의 전략적 옵션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쿠이크(Cheng-Chwee Kuik)의 헤징 유형론을 한국적 맥락에 맞게 변용해 적용한다.¹² 특히 공식 동맹이 헤징의 내부적 제약이자 핵심적인 전략 자원이라는 이중적 속성을 포착하기 위해, 본 연구는 쿠이크의 틀에 '동맹 기반 헤징(alliance-embedded hedging)'이라는 개념적 확장을 시도한다. 이는 단순히 위험을 분산하는 수동적 대응을 넘어, 동맹 관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재협상하고 재구성함으로써 국가적 자율성을 능동적으로 확보해 나가는 전략적 행보를 의미한다. 미·중 간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대한민국 외교가 직면한 고차방정식은 결국 '선택의 강요'를 어떻게 우회할 것인가로 귀결된다.

곽태환 교수가 제시하는 '최적의 균형된 외교(OBD-Optimal Balanced Diplomacy)'는 이러한 실존적 고민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법이다.¹³ 필자는 맹목적인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국익이라는 명확한 척도로 중심을 잡는 외교적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논리에 공감한다.

과연 한미동맹의 결속과 한중 협력의 유지는 공존불가능한 제로섬 게임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안보의 근간인 한미 핵심동맹을 공고히 관리하는 일과 경제 및 역내 안정의 중추인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 없이 지속하는 일은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당위다. 균형은 정지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흔들리며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 역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균형 잡힌 외교력은 단순히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을 막는 방어 기제에 그치지 않는다. 남북 관계의 교착과 동북아의 진영 대립을 깨뜨릴 판짜기, 즉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동력을 다시 확보하는 전략적 설계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미·중을 움직여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레버리지를 쥐는 것만이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낼 유일한 해법이다.

¹¹ Robert O. Keohane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4th ed. (Boston: Longman, 2012), 3-37.

¹² Cheng-Chwee Kuik,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 no. 100 (2016): 500-514.

¹³ 곽태환, "2026 베이징 미중정상 회담: 성과평가와 동북아 안보의 미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11> (검색일: 2026. 5. 17).

최근 북한의 공세적 현실주의적 기조에 기반한 핵무력 확장과 미·중 간의 전방위적 전략 경쟁,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지정학적 재편이 맞물리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복합적 위기 국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격변기는 기존 국제정치학 이론이 상정해 온 거시적 분석 틀의 한계를 고스란히 노출시키며, 한국 외교가 처한 구조적 특수성을 정밀하게 반영한 대안적 외교 안보 패러다임을 강력히 요구한다. 광태환 교수가 제시한 최적의 균형된 외교(OBD: Optimal Balanced Diplomacy) 전략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본고는 동 전략이 한국의 외교적 자율성과 선진 중견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외교 프레임워크가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중심으로 그의 핵심 주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의 현실주의 담론, 즉 공세적·방어적·구조적 현실주의 및 일반적인 헤징(hedging) 전략과의 비교론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기존 이론들은 강대국 중심의 권력 배분이나 체제 안정성에 주목함으로써 한국과 같은 중견국이 직면한 독특한 비대칭적 안보 딜레마를 설명하는 데 명확한 한계를 지닌다. 반면 OBD 전략은 각 이론의 분석적 유용성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극대화하여 구조적 제약 속에서도 외교적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OBD 전략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는 크게 네 가지로 구체화된다. 첫째는 동맹 체제를 확고한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외교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맹 기반 헤징이며, 둘째는 군사와 경제가 복합적으로 얽힌 다차원적 공간을 입체적으로 조망하는 복합 지정학적 접근이다. 셋째는 미·중 역학 관계의 틈새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균형된 외교 기동이며, 마지막 넷째는 선진 중견국에 걸맞은 가치와 역할을 투사하는 규범적 리더십의 발휘이다. 이들 요소는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해 한국 외교의 다변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인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OBD 전략의 실효적 구현을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정책적 행보가 요구된다. 구체적인 실행 과제로는 국가 안보의 근간인 군사적 억제력을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경제·기술적 자율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아울러 미·중 관계의 부침에 흔들리지 않는 외교적 균형을 집요하게 추구해야 하며, 다자주의 협력 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비전통적 안보 분야의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는 이니셔티브를 구축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광태환 교수가 주창한 OBD 전략은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수동적으로 종속되던 과거의 외교적 관성을 단호히 거부한다. 이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지정학적 숙명을 능동적 기회로 전환하고, 선진 중견국으로서의 독자적 위상과 자율적 행위자성을 구조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전향적인 외교적 나침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지닌다.

필자가 본고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동맹 기반 헤징도 사실상 최적의 균형된 외교(OBD)와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맥락이다. 진정한 전략적 자율성이란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선택의 폭을 넓히는 헤징 역량이다. 동맹의 신뢰자산을 유지하며 최악 경로를 사전에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독자억제 자강력과 기술공급 제어력을 영향력으로 하여 전략적 설계자로 판세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한국 생존의 바람직한 경로이다.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학술적 성취를 거두었음은 자명하나, 변화하는 지정학적 역동성을 온전히 포착하기에는 몇 가지 분석적 공백이 관찰된다. 본고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 접근을 시도한다.

첫째, 이론적 층위에서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 간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봉합하지 않고 분석틀 내에 의도적으로 내재화한다. 한국이 직면한 안보 딜레마는 현실주의적 권력 정치나 자유주의적 상호의존 논리 중 어느 하나만으로 규명될 수 없다. 오히려 두 논리가 상충하며 동시에 가해오는 구조적 압박 그 자체가 분석의 핵심 대상이다.

둘째,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를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복합 지정학(Complex Geopolitics)'이라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같은 사안이 단순한 산업 정책의 범주를 넘어 안보 전략의 핵심 변수로 작용하는 작금의 현실을 분석에 투영하기 위함이다.

셋째, 2026년 현재 시점의 최신 전략 환경 변화를 연구의 시의성 속에 통합한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2026 국가방위전략(NDS 2026)' 발표와 북·러 조약의 실질적 운용 양상, 그리고 핵협의그룹(NCG)의 고도화된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다룸으로써 정책적 실효성과 최신성을 확보한다.

제3장. 동북아 안보 지형의 다극화와 블록화: 군비 경쟁과 경제 안보의 교차

3.1 허브-앤-스포크 구조의 침식

냉전 이후 동북아 안보 질서를 지탱해 온 미국의 '허브-앤-스포크(Hub-and-Spoke)' 구조가 안팎의 파상공세 속에서 전례 없는 구조적 균열을 드러내고 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성립 이래,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의 개별 쌍무 동맹을 통해 지역 안정을 관리하는 유일한 중추(Hub)로 기능해 왔다. 이 체제의 핵심은 미국이 모든 정보와 안보 자산을 독점적으로 집약하고, 스포크(Spoke)인 동맹국들이 상호 간의 수평적 연대보다는 미국을 경유하는 수직적 의존에 안주하게 만드는 통제 논리였다.¹⁴

그러나 이 견고했던 설계도는 이제 두 갈래의 도전에 직면했다. 첫 번째 충격은 동맹의 심장부인 미국 내부에서 발원한다.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NDS 2026이 명문화한 '조건부 동맹' 개념은 미국의 안보 공약이 더 이상 무조건적 시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선언했다. 미국의 방위 의지가 동맹국의 기여도에 따라 철저히 가변적일 수 있다는 거래주의적 발상은 '거부에 의한 억제' 전략 및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 추진과 맞물리며 선명한 신호를 보낸다.¹⁵ 이는 군사 자산의 본토 우선 집중을 의미하며,

¹⁴ G. John Ikenberry,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1, no. 1 (2016): 9-43; Sheila A. Smith,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12-40.

¹⁵ Thomas Karako, "Golden Dome for America: Integrate to Dominate." *CSIS Reports*. Washington, DC: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25.

동맹국들로 하여금 '보호받는 지위'에서 벗어나 각자도생 수준의 자강을 강요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두 번째 균열은 역내 경쟁국의 급부상이라는 외부적 현실에서 기인한다. 중국의 군사력 현대화, 특히 반접근·지역거부(A2/AD) 체계의 정교화는 미 전력이 유사시 신속히 투사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잠식하고 있다.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2025년 평가는 서태평양의 전력 균형이 이미 중국 쪽으로 가파르게 기울었음을 경고한다.¹⁶ 결국 이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뒷받침하던 군사적 우위라는 전제 자체가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단순한 심리적 문제를 넘어선 물리적 불능의 영역으로 밀어 넣고 있다.

3.2 다극화와 블록화의 비대칭적 진행

동북아시아의 블록화 현상은 선명한 이분법적 정렬이라기보다 비대칭적이고 유동적인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북·중·러 3자의 밀착은 견고한 이념적 동질성보다는 단기적 이해관계의 교차에 기반한 전략적 수렴에 가깝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지 않으며, 러시아와의 관계 역시 중앙아시아 패권이나 북극 자원 개발권을 둘러싼 잠재적 마찰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¹⁷ 반면, 한·미·일 삼각 협력은 2023년 캠프 데이비드 합의를 기점으로 제도화의 고삐를 죄고 있으나, 한·일 간의 뿌리 깊은 역사적 앙금과 각국의 가변적인 국내 정치 역학이 그 심화를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비대칭적 블록화의 균열 속에서 한국은 특정 진영으로의 결정적 선택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약 조건이 전략적 수동성을 정당화하는 논거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개별 블록이 완결된 형태로 고착되지 않은 현시점이야말로, 한국이 능동적으로 전략적 위치를 재설정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기회의 창(window of opportunity)'이 열려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

3.3 군비 경쟁의 새로운 위상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은 2022년을 기점으로 단순한 수적 팽창을 넘어 질적 도기에 진입했다. 이제 위협의 본질은 단순히 탄두의 숫자에 있지 않다. 다탄두 재진입 기술(MIRV), 고체연료 기반의 ICBM, 그리고 은밀성을 극대화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SIPRI 2025 연감의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약 50기의 핵탄두를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2030년경에는 이를 100기 수준으로 증강할 수 있는 실질적 잠재력을 확보했다.¹⁸ 더욱 치명적인 대목은 2022년 법제화된 북한의 핵 교리(nuclear doctrine)다. 선제적 핵 타격을 명문화하고 재래식 국지전의 임계점마저 낮추기 위해 전술핵 운용

¹⁶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5* (London: Routledge, 2025), 230–252.

¹⁷ Derek Grossman, "Is There a Russia-North Korea-China Axis?," RAND Blog, March 2024, <https://www.rand.org>; Angela Stent, *Putin's World: Russia Against the West and with the Rest* (New York: Twelve, 2019), 201–230.

¹⁸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ch. 10.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러한 공세적 전환은, 한반도 핵 억제력의 안정성을 담보하던 기존의 낙관적 가설들을 근본적으로 해체한다.¹⁹

이와 맞물려 역내 재래식 군비 경쟁 또한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일본은 2022년 이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전향적 결정을 내렸으며, 적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보유를 공식 선언했다. 한국 역시 이에 대응해 '3축 체계'의 실전적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²⁰ 이러한 군사력 확충이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국가적 자구책이자 합리적 선택임은 자명하다. 하지만 각 행위자의 합리성이 충돌해 오히려 지역 전체의 불안정성을 가속하는 이 구조적 역설이야말로 우려되는 지정학적 안보 딜레마라 할 수 있다<표 1>.

<표 1> 동북아 주요국 국방비 추이 (2020-2025)

(단위: 십억 달러)

국가	2020	2022	2024	2025
미국	778	858	916	952
중국	252	292	336	362
러시아	62	86	109	126
북한	~4.0	~4.5	~5.2	~6.0
한국	45	46	52	56
일본	47	46	55	72

출처: 저자의 재구성; SIPRI Military Expenditure Database (2025); IISS Military Balance (2025).

3.4 경제 안보와 공급망의 지정학

¹⁹ Ankit Panda, *Kim Jong Un and the Bomb: Survival and Deterrence in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89-221;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124524.html (검색일: 2024. 1. 15)

²⁰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2024 (Seoul: MND, 2025); Taeho Kim, "South Korea's Three-Axis System: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RUSI Journal* 169, no. 1 (2024): 44-58.

경제안보가 단순히 전통적 안보를 보완하는 지위를 넘어, 그 자체로 독자적인 안보 영역으로 급부상한 것은 2010년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뚜렷한 현상이다. 반도체,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이 지정학적 취약성을 노출하는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되면서, 경제 정책과 안보 전략 사이의 해묵은 경계는 사실상 붕괴했다. 패럴(Henry Farrell)과 뉴먼(Abraham Newman)이 정립한 '무기화된 상호의존(weaponized interdependence)'은 이러한 상호 연결성이 어떻게 국가 강압의 수단으로 변모하는지를 가장 정밀하게 포착하는 이론적 틀이다.²¹

한국은 이 거대한 전환의 소용돌이 속에서 유독 복잡하고도 위태로운 지점에 서 있다. 세계적 수준의 첨단 반도체 경쟁력을 보유했다는 자산은,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치열한 전장(battleground)으로 내몰았다. 미국은 첨단 기술의 대중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의 전방위적 동참을 거세게 압박하는 반면, 중국은 이에 대응하여 희토류 수출 통제와 시장 접근 제한이라는 비대칭적 보복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1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구조적 연계성은 한국에게 단기간에 끊어낼 수 없는 실존적 제약이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이다.²²

<표 2> 한국의 주요 교역 구조와 전략 물자 의존도 (2025년 기준)

항목	미국	중국	비고
수출 비중	18.3%	19.1%	대중 수출 2023년 이후 감소세
수입 비중	11.2%	22.4%	희토류·중간재 의존
반도체 수출	對美 주요	對中 제한 강화	CHIPS Act 영향
핵심 광물	일부동맹 다변화	구조적의존 지속	공급망 재편 진행 중

출처: 저자 재구성; 한국무역협회 (2025); KITA 데이터.

현존하는 지정학적 딜레마를 순전히 피동적인 제약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한국이 보유한 전략적 자산의 가치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유약한 인식이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확보한 반도체 기술은 단순한 산업적 우위를 넘어선 국가 안보의 핵심 자산이다. 특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독점적으로 공급하다시피 하는 HBM3E 기술이나 삼성전자의 3나노 이하 선단 공정 파운드리 기술은 미국조차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의 도움이 필요한 영역이다.

²¹ Farrell and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42-79.

²² Jung-Ho Bae and Sung-Hack Kang, "South Korea's Semiconductor Dilemma in the US-China Tech War," *Asian Security* 20, no. 3 (2024): 211-234; 한국무역협회, 2025 무역통계 (서울: KITA, 2025).

최근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 동유럽을 휩쓸고 있는 K-방산의 저력—K9 자주포의 압도적인 납기 능력과 K2 전차의 실전 성능—은 한국을 글로벌 안보 공급망의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격상시켰다. 중국은 반도체 장비 규제에 막혀 있고, 미국은 제조업 기반 약화로 당장 무기를 찍어낼 공장이 부족하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기술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악'이자 '기회의 창'이 되는 독보적인 레버리지가 된다. 이러한 기술 자산을 단순히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수성(守城)'의 대상으로만 관리할 것이 아니라, 이를 대외 전략의 핵심 도구로 능동적으로 운용한다면 한국은 강대국 경쟁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닌, 관세를 주도하는 실질적인 협상자(negotiator)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다.²³

제4장. 북·러 군사 협력의 전략적 함의와 한반도의 미래

4.1 조약의 성격: 외교적 수사인가, 구조적 변화인가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단순한 수사적 선언을 넘어선 엄중한 실체적 위협이다. 특히 조약 제4조가 명시한 "지체 없는 군사 및 기타 원조(prompt military and other assistance)"는 법적 해석의 층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경로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과거와 궤를 달리한다. 이는 북·러 관계가 단순한 친선을 넘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안보 결탁의 단계로 진입했음을 공포하는 서막이다.²⁴

이러한 결속의 이면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시공간에서 형성된 상호 이해관계의 일치가 자리한다. 북한은 러시아에 포탄과 탄도미사일 등 방대한 재래식 화력을 병참 지원하는 대가로, 정찰위성 및 잠수함 기술, 나아가 현대전의 실전 데이터를 이식 받는 군사적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²⁵ 이 위험한 거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치명적이다. 우선 외부의 기술적 수혜를 통해 북한의 전력 고도화가 가속화될 우려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이슈의 '거부권 행사자(veto player)'로 안착하며 향후 안보 협상의 판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4.2 확장억제 신뢰성에 대한 복합적 도전

북·러 조약이 한·미 확장억제 태세에 던지는 도전은 단순한 군사적 수치의 증강을 넘어, 안보 환경의 구조적 불확실성이 비약적으로 증대했다는 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만약 유사시 러시아가 북한에 외교적 엄호와 군사적 자산을 실질적으로 제공할 경우, 그간

²³ Jae-seung Lee,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nd Defense Industry as Strategic Asset," *Pacific Affairs* 97, no. 2 (2024): 301–326; Jina Kim and Scott A. Snyder, *South Korea's Grand Strategy: Making Its Own Luc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pp. 78–112.

²⁴ Georgy Toloraya,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891 (September 2024);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9, 2024, Article 4,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id.ru> (검색일: 2024. 6. 19).

²⁵ Celeste Arrington and William J. Perry, "North Korea's Military Assistance to Russia: Scope, Scale, and Strategic Implications," *War on the Rocks*, February 14, 2024, <https://warontherocks.com> (검색일: 2024.2.14); "North Korea Sends More Troops to Russia," Reuters,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4. 10. 18)

한·미 동맹이 상정해 온 전쟁 수행 시나리오의 전략적 함수는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해진다. 이는 한반도 분쟁이 더 이상 한·미 대 북한이라는 평면적인 양자 구도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전조다.²⁶

확장억제의 핵심인 '신뢰성(credibility)' 자산은 2023년 워싱턴 선언과 핵 협의그룹(NCG)의 출범을 통해 어느 정도 제도적 안정을 찾아왔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함께 핵 협의 그룹이 실질적으로 가동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미국의 대북 기조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원론적 명분에서 '실용적 위협 관리' 및 미 본토 타격 능력 차단이라는 지극히 자국 중심적인 이익으로 수렴될 경우, 확장억제의 근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정의될 수밖에 없다.²⁷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의 '거부에 의한 억제(deterrence by denial)' 전략이 내포한 함의는 지극히 양면적이다. 한편으로 북한의 초기 핵 타격 시도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데 주력하는 이 전략은 핵 전쟁의 문턱(threshold)을 높이는 긍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전략이 미국의 강력한 '보복 공약'보다 방어적 차단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비춰질 경우,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한 제한적 핵 사용 가능성을 더욱 과감하게 타진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역설이 존재한다.

4.3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 세 가지 경로

북·러 군사 협력의 심화와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이 교차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조망하는 일은 단순히 특정 결과를 예단하는 차원을 넘어선다. 이는 발생 가능한 경로들의 구조적 논리를 규명하고, 각 시나리오가 내포한 지정학적 역할 관계를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어야 한다.

경로 1: 관리된 긴장 상태의 관성적 지속이다. 현 정세가 질적 전환 없이 교착되는 시나리오다. 북한은 핵 투사 수단의 고도화를 멈추지 않으며 협상 레버리지를 극대화하고, 미·북 간 탐색적 접촉은 재개되나 실질적 타결에는 이르지 못하는 소강상태의 반복이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한국은 지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 결정적 전략 선택을 유예당한 채 기존 안보 구조에 고착될 위험이 크다.

경로 2: 미·북 간의 제한적 합의와 거래적 외교이다. 차기 트럼프 행정부 특유의 거래주의적 외교 기조가 북한과의 변칙적인 합의로 이어지는 경로다. '완전한 비핵화(CVID)'라는 당위적 목표 대신 핵 동결이나 제한적 군비 통제라는 실용적 타협안이 가시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은 동맹국 간 협상 과정에서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의 위협에 직면하게 되며, 동시에 이 유동적 정세를 역이용해 한반도 안보에 실익을 가져올 능동적 전략 프레임을 가동해야 한다.²⁸

경로 3: 우발적 충돌에 의한 군사적 확전이다. 지휘통제의 오판이나 국지적 마찰이 제한전으로 비화하는 파국적 시나리오다. 특히 북한의 핵 교리가 전술적 운용을

²⁶ Bruce W. Bennett, "How the Russia-North Korea Pact Changes the Security Calculus,"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 (검색일: 2024. 7. 1)

²⁷ Terence Roehrig,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e Washington Quarterly* 47, no. 1 (2024): 89-106.

²⁸ Scott A. Snyder,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145-189.

정당화하는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기존의 공포의 균형이나 억제 논리가 무력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비록 발생 확률은 낮으나,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궤멸적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Worst-case)에 대비한 안보 태세의 재설계를 요구한다.

이 세 가지 경로 중 어느 하나를 확정적 미래로 단정 짓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불확실성 자체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명확하다. 한국은 특정 단일 시나리오에 전략적 자산을 투인하는 도박을 피해야 하며, 복수의 경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안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만 한다.

4.4 러시아의 한반도 전략 재등장

2022년 이전까지 러시아는 한반도 안보 담론에서 중국의 영향력 아래 가려진 채 다소 주변적인 행위자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격히 심화된 북·러 군사 밀착은 러시아를 한반도 안보 방정식의 핵심이자 무시할 수 없는 독자적 변수로 급부상시켰다. 특히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 노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다자 외교를 통해 유지해 온 북핵 관리 체제의 실효성을 구조적으로 붕괴시키고 있음을 의미한다.²⁹

이러한 시각 변동은 한국에 대러 외교의 전면적인 재조정을 요구한다. 러시아를 단지 중국의 종속 변수나 일방적인 제재 대상으로만 치부하는 평면적인 시각은 복잡해진 국제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할 뿐이다. 이제는 러시아의 극동 개발에 대한 실질적 이해관계, 한·러 에너지 및 경제 협력의 역사적 자산, 그리고 러시아 내부의 대북 정책을 둘러싼 복합적인 논쟁 지점들을 세밀하게 파고드는 정교한 접근이 시급하다. 물론 이러한 전략적 유연성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묵인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한국이 천명한 가치 기반 외교의 대원칙과 국익 사이에서 정교한 균형점을 찾아내야만 한다.

제5장. 결론: 연구의 요약과 실현 가능한 정책 대안

5.1 분석의 요약

본 연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재편되는 동북아 안보 지형의 구조적 변동을 세 가지 거시 변수의 복합적인 작용 결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냉전기 안정의 토대였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구조적 침식, 미·중 패권 경쟁의 질적 심화, 그리고 북·러 군사 협력의 명문화 및 제도화를 핵심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론적 분석에서는 공세적 현실주의가 상정하는 구조적 압력과 복합 상호의존론이 포착하는 비군사적 연계망을 결합하되, 양 이론이 형성하는 내재적 긴장을 분석의 동력으로 활용하였다. 특히 쿵크(Cheng-Chwee Kuik)의 헤징 이론을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춰 '동맹 기반 헤징'이라는 개념적 변형을 통해 재조정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 외교가 기존의 소극적 대응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다층적인 헤징 전략으로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증하였다. 동맹 기반 헤징은 한미동맹이라는 고정 변수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보험을 드는 복합적인 생존 전략이다. 기존의 헤징이 미중

²⁹ Eugene Rumer, "Russia in the Asia-Pacific: Less Than Meets the Ey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검색일: 2020.9.3)

사이에서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수준이었다면, 동맹 기반 헤징은 동맹의 견고함을 지렛대 삼아 주변국과의 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이 사드(THAAD) 사태 이후 겪었던 외교적 진통은 전략적 선명성이 부족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제는 쿼드(QUAD)나 오커스(AUKUS)와의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역내 다자간 경제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식으로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 이것은 단순히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를 늘리는 능동적인 포석이라 할 수 있다.

<표 3> 한국의 전략적 옵션 평가 매트릭스

전략 옵션	안보 효과	경제 비용	동맹 신뢰도	실현 가능성	비고
완전대미 편승	높음	중 ~ 고	강화	중	대중경제 손실불가피
전략적중립 추구	낮음	낮음	심각한 약화	낮음	안보보장 상실 위험
소극적헤징 (현상 유지)	중	낮음	현상 유지	높음	장기전략 부재 위험
능동적다층 헤징	중 ~ 높음	중	강화 + 자율성 확대	중 ~ 높음	본연구 권고 방향
독자 핵 무장	단기높음	매우높음	심각한손상	낮음	NPT 탈퇴 · 제재 위험

출처: 저자 작성.

5.2 정책 대안: 객관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향

본 연구가 제안하는 정책 대안은 한미확장억제, 재래식 억제역량 확충, 소다자 협력네트워크의 확장, 실용적 군비 통제, 그리고 포용적 안보개념의 확산을 포함하는 다음 5개의 축으로 구성된다.

첫째,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이다. 확장억제의 신뢰성 결여는 단순히 물리적 군사 자산의 양적 부족이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의 폐쇄성과 정보 공유의 비대칭성에서 기인한다. 한국이 미국의 핵 기획 메커니즘에서 실질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면, 방위비 분담의 증액만으로는 구조적 취약성을 해소할 수 없다. 따라서 핵협의그룹(NCG)을 단순한 정보 공유 창구를 넘어 실질적인 '공동 핵 기획 플랫폼'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나토(NATO)의 핵기획그룹(NPG) 모델은 동북아의 특수성을 반영한 변형을 전제로 충분히 이식 가능한 모델이다.³⁰ 특히 한국 군의 표적 분석 역량 강화와 연합 작전 계획

³⁰ Terence Roehrig, "Nuclear Consultative Group," 89-106; Patricia M. Lewis and Nikolai Sokov, "NATO's Nuclear Sharing Arrangements: Lessons for Northeast Asia?," *Survival* 66, no. 2 (2024): 67-88.

수립에 대한 실질적 접근권 확대가 담보되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요구는 역설적으로 '더 많은 기여'에 따른 '더 많은 발언권'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협상 근거가 될 것이다.

둘째, 독자적 재래식 억제 역량의 단계적 확충이다. 독자적 억제력 강화는 동맹의 대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 내 한국의 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방향이어야 한다. '3축 체계'를 2030년까지 완비하되, 특히 정찰 위성과 극 초음속 정밀 타격 수단을 통한 킬 체인의 고도화에 집중해야 한다.³¹ 독자 핵무장에 대해서는 국제적 고립과 제재 등 막대한 비용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하되, 핵 연료 주기 기술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전략적 선택지를 유지하기 위한 지적·기술적 준비는 지속되어야 한다.³² 국방비의 GDP 대비 3% 수준 증액은 정치적 과제이나, 미국의 방위비 압력을 국내 국방력 강화의 정당화 기제로 활용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셋째, 소다자 안보 협력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장이다. 동맹의 가변성에 대비한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분산은 안보 협력국의 다변화와 네트워크의 다층화다. 한·미·일 삼각 협력을 근간으로 하되, 호주, 영국 등 가치 공유국들과의 다자 안보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³³ 다시 말해 단순히 균형외교를 넘어 국익을 최적화하기 위해 OBD(Optimal Balanced Diplomacy)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³⁴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병행하고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을 통해 북·러 밀착을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K-방산의 성장세를 단순한 경제적 실익을 넘어 안보 외교의 레버리지로 치환해야 한다. 방산 협력은 기술 공유와 상호 운용성 증진을 통해 한국을 안보 수혜국에서 지역 안보의 공급자로 격상시키는 핵심 통로가 된다.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보다는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리스크 관리에 주력해야 하며, 한·일 관계도 역사인식문제를 초월하여 안정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실용적 대북 군비 통제 접근이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는 전통적 목표가 현실적 임계점을 지나 달성 불가능한 영역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지극히 불편할지라도 반드시 직시해야만 하는 전략적 실체다. 당위적 목표에 대한 강박적 집착은 오히려 실질적인 위협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기회비용을 증대시키며 안보 공백을 야기한다. 이에 따라 단계적 핵 동결과 위험 감소(risk reduction)를 중간 목표로 설정한 실용적 군비 통제(arms control) 접근법을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모색해야 한다.³⁵ 이는 북한의 핵 보유를 규범적으로 용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하는 핵 위협을 물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현실주의적 교육지책이다. 구체적인 이행 경로에는 북한 핵 프로그램의 동결 및 다층적 검증 체계 수립, 우발적

³¹ Kim, "South Korea's Three-Axis System," 44-58;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2025 ROK Defense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5).

³² Mark Bell, *Nuclear Reactions: How Nuclear-Armed States Beha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180-215; Seong-Chang Cheong, *The South Korean Nuclear Debate: Proliferation Risks and Policy Options*, Sejong Policy Brief 2024-11. (Seongnam: Sejong Institute, November 2024), <https://www.sejong.org>. (검색일: 2023. 7.21)

³³ Terence Roehrig,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pril 2024)

³⁴ 곽태환, "2026 베이징 미중정상 회담: 성과평가와 동북아 안보의 미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 (검색일: 2026. 5. 17)

³⁵ Vipin Narang,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201-230; Siegfried Hecker, "A Comprehensive History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April, 2019. <https://thebulletin.org>. (검색일: 2023.2. 20)

군사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 채널의 복원,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단계적 제재 완화와 연동된 핵 감축 협상이 포함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적 외교 기조가 이러한 실무적 접근과 궤를 같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 하노이 정상회담의 결렬이 남긴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 한국이 협상의 단순한 관찰자로 전락하지 않고 핵심 이해당사자로서 판을 주도하는 구조적 틀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정치 지형에서 상당한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 핵 동결을 사실상의 핵 보유 승인으로 간주하는 근본주의적 시각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 동결이 부재한 상태에서 방치된 핵 능력의 고도화가 한국의 국가 안보에 부과하는 실존적 비용을 공론의 장에서 가감 없이 논의해야 한다. 이러한 솔직한 비용-편익 분석만이 실용적 안보 노선에 대한 국내적 지지 기반을 구축하는 유일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다섯째, 포용적 안보개념의 확산이다. 포괄안보, 기후대응, 전염병, 자연재해 등 남북이 협력할 분야를 찾아보는 것이다. 포용적 안보 개념의 확산은 남북한이 전통적인 군사적 대치 중심의 안보 메커니즘을 탈피하여, 포괄적 안보 영역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모색하는 패러다임의 전회를 의미한다. 이는 국가 중심의 기존 안보관이 지닌 협소성을 극복하고 인간 안보, 사회 안보, 환경 안보를 종적으로 연계하는 다층적 접근을 핵심 골자로 한다.

기후위기 대응 역시 한반도 생태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접점이다. 구체적으로는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의 공동 수립, 탄소 중립 로드맵의 상호 공유, 다자간 산림 관리 사업의 다각화 등이 요구된다. 아울러 초국성 감염병 대응은 코로나19 이후 상시화된 신종 바이러스 위협에 맞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제도화하고, 백신 및 치료제의 공동 연구·생산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

홍수, 가뭄, 지진을 비롯한 자연재해 공동 대응 체계의 정비도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초동 구조·복구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역의 인명 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실효적 기제로 기능한다. 이와 같은 포용적 안보 협력은 군사적 긴장 완화라는 단선적 목표를 넘어, 다원화된 영역에서 구조적 신뢰를 축적하는 이른바 ‘안보의 다각화(Diversification of Security)’ 전략으로 평가된다. 비정치적·비군사적 의제에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신뢰의 지평을 확장하는 이러한 실용주의적 접근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핵심 동인이다. 비전통적 안보 영역을 매개로 한 남북 협력의 제도화는 궁극적으로 국제사회의 지지와 관여를 견인하며, 동북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지향적 초석을 제공한다.

5.3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본 연구의 전략적 제언이 지닌 유효성에도 불구하고, 학술적 엄밀성 확보를 위해 노동된 구조적 한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5년 단임제 하의 정권 교체 주기와 요동치는 민심의 향배, 그리고 예산권과 입법권을 쥔 국회의 견제 기능 등 국내 정치적 변수가 대외 전략에 가하는 하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 국가의 전략 수립은 단순한 지정학적 함수 관계를 넘어, 국내 정치적 이해관계라는 '제도적 필터'를 거치며 변형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치(內治)의 변수를 고려하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명백한 공백이며, 이는 차기 연구에서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분석적 과제다.

아울러 북한 내부 변수에 대한 분석의 불완전성 또한 겹쳐서 인정한다. 김정은 정권의 핵 의사결정 체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을 수정주의적 목표를 가진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로 상정하는 것은 상당한 분석적 위험을 내포한다. 북한 체제 내의 우발적 요인이나 비합리적 판단 가능성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며, 이러한 복합적 변수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안보 모델링이 후속 연구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5.4 전략적 자율성이란 무엇인가

강대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나 독립을 전략적 자율성으로 상정하는 접근은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을 도외시한 비현실적 설정이며, 오히려 기존 안보 공약을 약화시켜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이란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유지하는 틀 안에서, 핵심 국익과 직결된 결정이 외부의 강압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약당하지 않도록 전략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실질적 헷징(hedging)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자율성은 단순한 물리적 무력의 과시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저에 둔 상태에서 군사적 억제력, 반도체 및 방산 분야의 기술적 레버리지, 다층적 외교 네트워크, 그리고 국내 정치적 정당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체적 성격을 띤다. 특정 요소로 치환될 수 없는 이 복합적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하여 전략적 선택지를 다변화하는 것이야말로, 극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관통하는 한국의 가장 지속 가능한 안보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안보 환경에서 불확실성이라는 상수를 완전히 소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나 동맹의 가치를 견지하면서도 가변적인 정세 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를 회피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경로를 선점할 수 있는 헷징 역량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 전략이 지향해야 할 지극히 현실적이고도 가치 있는 목표다. 바로 이 지점이 동맹의 신뢰와 자율적 선택권 사이의 최적 균형을 모색해야 하는 한국 안보 정책의 본질적인 전략적 방향성이다. /끝/

참고문헌

Ankit Panda, *Kim Jong Un and the Bomb: Survival and Deterrence in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89-221; Robert L. Carlin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https://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international/1124524.html (검색일: 2024. 11. 15)

Arrington Celeste and William J. Perry. "North Korea's Military Assistance to Russia: Scope, Scale, and Strategic Implications." *War on the Rocks*, February 14, 2024, <https://warontherocks.com>; "North Korea Sends More Troops to Russia," Reuters, October 2024, <https://www.reuters.com>. (2024. 10. 18)

Bae Jung-Ho and Sung-Hack Kang. "South Korea's Semiconductor Dilemma in the US-China Tech War," *Asian Security* 20, no. 3 (2024): 211-234; 한국무역협회. 2025 무역통계 (서울: KITA, 2025).

Bell Mark. *Nuclear Reactions: How Nuclear-Armed States Beha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180–215; Cheong, Seong-Chang. "The South Korean Nuclear Debate: Proliferation Risks and Policy Options." *Sejong Policy Brief* 2024-11. Seongnam: Sejong Institute, November 2024. <https://www.sejong.org>. (검색일: 2023. 7. 21)

Bruce W. Bennett, "How the Russia-North Korea Pact Changes the Security Calculus,"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 (검색일: 2024. 7. 1)

Celeste Arrington and William J. Perry, "North Korea's Military Assistance to Russia: Scope, Scale, and Strategic Implications," *War on the Rocks*, February 14, 2024, <https://warontherocks.com> (검색일: 2024.2.14); "North Korea Sends More Troops to Russia," Reuters, <https://www.reuters.com>. (검색일: 2024. 10, 18)

Cha Victor D. *Powerplay: The Origins of the U.S. Alliance System in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6 1–30; Victor D, Cha. "The 'Alignment' Paradox: The Security Dilemma in Northeast Asia," *Journal of Strategic Studies* 46, no. 5 (2023): 891–915.

Colby Elbridge A. *The Strategy of Denial: American Defense in an Age of Great Power Conflict*.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21, 157–199.

Eugene Rumer, "Russia in the Asia-Pacific: Less Than Meets the Ey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검색일: 2020.9.3)

Eugene Rumer, "Russia in the Asia-Pacific: Less Than Meets the Ey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https://carnegieendowment.org>. (검색일: 2020.9.3)

Farrell Henry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no. 1 (Summer 2019): 42–79.

Grossman, Derek. "Is There a Russia-North Korea-China Axis?." RAND Blog, March 2024, <https://www.rand.org>; Stent, Angela. *Putin's World: Russia Against the West and with the Rest*. New York: Twelve, 2019, 201–230.

Henry Farrell and Abraham L. Newman. "Weaponized Interdependence: How Global Economic Networks Shape State Coercion." *International Security* 44, no. 1 (2019): 42–79.

Ikenberry G. John. "Between the Eagle and the Dragon: America, China, and Middle State Strategies in East Asia," *Political Science Quarterly* 131, no. 1 (2016): 9–43; Sheila A. Smith. *Japan Rearmed: The Politics of Military Power*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9. 12–40.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 *The Military Balance 2025*. London: Routledge, 2025, 230–252.

Keohane Robert O. and Joseph S. Nye. *Power and Interdependence*, 4th ed. Boston: Longman, 2012, 3–37.

Kim, Jin-moo. "South Korea's Three-Axis System," 44–58;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KIDA), *2025 ROK Defense White Paper*. Seoul: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25.

Kuik Cheng-Chwee. "The Essence of Hedging: Malaysia and Singapore's Response to a Rising China."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0, no. 2 (2008): 159-185; Kuik, "Hedging in Post-Pandemic Asia: What, How, and Why?," *The Pacific Review* 34, no. 6 (2021): 1-20.

Kuik Cheng-Chwee. "How Do Weaker States Hedge? Unpacking ASEAN States' Alignment Behavior,"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25, no. 100 (2016): 500-514.

Lee, Jae-seung. "South Korea's Middle Power Diplomacy and Defense Industry as Strategic Asset," *Pacific Affairs* 97, no. 2 (2024): 301-326; Kim Jina and Scott A. Snyder. *South Korea's Grand Strategy: Making Its Own Luck*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23, 78-112.

Lind Jennifer and Darren G. Lipson. "South Korea's Nuclear Options: Proliferation Risks and Alliance Stability." *International Security* 49, no. 2 (Fall 2024): 7-51.

Mark Bell, *Nuclear Reactions: How Nuclear-Armed States Behav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21), 180-215; Seong-Chang Cheong, *The South Korean Nuclear Debate: Proliferation Risks and Policy Options*, Sejong Policy Brief 2023-11 (Seongnam: Sejong Institute, November 2023), <https://www.sejong.org>.(검색일: 2023. 7. 21)

Mearsheimer John J. *The Tragedy of Great Power Politics*. updated ed. (New York: Norton, 2014), 29-54; John J. Mearsheimer, "The Inevitable Rivalry: America, China, and the Tragedy of Great-Power Politics," *Foreign Affairs* 100, no. 6 (2021): 48-58.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ublic of Korea. *Defense White Paper 2024* Seoul: MND, 2025; Kim Taeho. "South Korea's Three-Axis System: Current Status and Future Challenges," *RUSI Journal* 169, no. 1 (2024): 44-58.

Narang Vipin. "Seeking the Bomb: Strategies of Nuclear Proliferati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22, pp. 201-230, Hecker Siegfried. "A Comprehensive History of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 2024, <https://thebulletin.org>. (검색일: 2023. 2. 20)

Panda Ankit. *Kim Jong Un and the Bomb: Survival and Deterrence in North Kore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20, 189-221; Carlin Robert L. and Siegfried S. Hecker. "Is Kim Jong Un Preparing for War?," *38 North*, January 11, 2024, <https://www.38north.org>. (검색일: 2024. 11. 11)

Roehrig, Terence.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Credibility of Extended Deterrence," *The Washington Quarterly* 47, no. 1 (2024): 89-106.

Rumer Eugene. "Russia in the Asia-Pacific: Less Than Meets the Ey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March 2024, <https://carnegieendowment.org>.(검색일: 2020.9.3)

Roehrig, Terence.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Japan* (Washington, DC: Korea Economic Institute of America, April 2024)

Snyder, Scott A. *South Korea at the Crossroads: Autonomy and Alliance in an Era of Rival Pow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8, 145-189.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SIPRI Yearbook 2025: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5, ch. 10.

Toloraya, Georgy. "The Military Alliance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Implications for Northeast Asia." *PONARS Eurasia Policy Memo*, no. 891 (September 2024); "Treaty on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June 19, 2024, Article 4, Russian Ministry of Foreign Affairs, <https://www.mid.ru> (검색일: 2024. 6. 19)

Tooze Adam. "Welcome to the World of the Polycrisis." *Financial Times*, October 28, 2022, <https://www.ft.com/content/498398e7-11b1-494b-9cd3-6d669dc3de33>.(검색일: 2022. 10. 28)

U.S. Department of Defense, *National Defense Strategy 2026* (Washington, DC: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2026), 14–22; Tom Karako, "Golden Dome and the Future of Homeland Missile Defense," *CSIS Missile Defense Project*, , <https://www.csis.org/topics/golden-dome-america> (검색일: 2025. 6.4)

곽태환, "조건부 동맹의 시대: NDS 2026이후 한미동맹의 구조적 전환과 전략적 합의," *통일뉴스* "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01>" (검색일: 2026.2.1)

곽태환, "2026 베이징 미중정상 회담: 성과평가와 동북아 안보의 미래," *통일뉴스*, <https://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6511> (검색일: 2026. 5. 17).

제 55회 전문가 정책포럼 토론편 (무순: 제출 순서대로 편집)

I. 이상환 박사 (한국 외국어 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1. 총론

본 발표문은 최근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를 단순한 정세 변화가 아닌 구조적 전환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 북·러 군사협력,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세 변수의 상호작용을 복합위기(polycrisis) 개념으로 설명한 점은 적절하다.

또한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을 결합해 안보와 경제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 기반 헤징’이라는 개념을 제시한 점 역시 중요한 기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론적·정책적 측면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세부 논평

(1) 동북아 질서는 ‘신냉전’인가, ‘관리된 불안정’인가?

발표문은 동북아 정세를 신냉전적 구도로 설명하고 있으나 동시에 국제질서의 미래를 ‘관리된 불안정(managed instability)’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과거 미소 냉전과 달리 경제적 상호의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완전한 신냉전 개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한·중·일 공급망은 여전히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기후변화·보건안보·에너지·해양안보 등 초국경 의제에서는 협력의 필요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 질서를 ‘신냉전’으로 규정하기보다 ‘경쟁과 협력이 병존하는 관리된 불안정 질서’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다.

(2) 한국 외교의 핵심 과제는 헤징보다 ‘전략적 자율성’인가?

발표문은 헤징 자체보다 전략적 자율성(strategic autonomy)의 확대를 강조한다.

특히 한국은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중 의존 구조(Dual Dependence Trap)’에 놓여 있다고 진단한다.

문제는 향후 미·중 경쟁이 심화될수록 전략적 선택 압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략적 자율성은 단순한 중립이나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되 ASEAN, 인도, 유럽, 글로벌 사우스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여 선택 공간을 넓히는 적극적 다변화 전략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3) 경제안보와 기술외교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할 필요가 있다.

발표문이 가장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부분은 경제안보(Economic Security)와 기술외교의 중요성이다.

오늘날 반도체, AI, 배터리, 핵심광물, 데이터는 단순한 산업정책 대상이 아니라 국가전략 자산이 되고 있다.

향후 국가경쟁력은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공급망 통제력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 외교도 전통적인 안보외교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통상·기술·외교를 통합하는 전략외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4) 글로벌 책임 중견국 전략의 구체화 필요

발표문은 한국 외교의 비전을 “자유·평화·번영을 선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중견국 외교를 넘어 국제질서 형성에 참여하는 적극적 역할을 의미한다.

그러나 글로벌 책임국가 개념이 실질적 정책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

한국이 비교우위를 가진 분야인 공급망 안정, 디지털 규범, 기후변화, 보건안보, 개발협력, 해양안보 등을 중심으로 선택과 집중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다.

3. 정책 제언

첫째,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핵심 축으로 유지하되 경제안보·기술·공급망 협력까지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ASEAN, 인도, 유럽, 글로벌 사우스와의 다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외교적 선택지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경제안보를 국가전략의 중심축으로 격상시켜야 한다.

반도체, AI, 배터리, 조선, 방산, 핵심광물은 국가안보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

외교·산업·통상·기술 정책을 통합하는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북핵 대응에는 억제와 관리의 병행전략이 필요하다.

확장 억제를 강화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위기관리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단계적 비핵화와 군비 통제 접근을 포함한 현실적 대북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중견국 네트워크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가치 공유 중견국과 기능별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기후·보건·디지털 규범·공급망·해양안보 분야에서 국제규범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다섯째, K-이니셔티브를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K-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국가 브랜드 전략이 아니라 가치외교, 경제안보, 공공외교, 과학기술외교를 통합하는 국가전략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은 ‘문제 해결형 국가(problem-solving state)’이자 ‘G7+ 외교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핵심 메시지는 강대국 경쟁 속에서 한국이 단순히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가치와 이익을 연결하고 공급망·기술·규범 협력을 조율하는 전략적 핵심 중견국(Strategic Core Middle Power)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 외교의 과제는 ‘동맹과 자율성’, ‘가치와 실용’, ‘안보와 경제안보’를 균형 있게 결합하는 원칙 기반 실용외교를 통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다고 평가된다.

부록 [이상수 박사 논문 요약]

1. 문제제기

본 연구는 지난해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가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자는 현재 동북아가 미국 주도의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침식,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한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되어 한반도에 복합위기(polycrisis)를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의 안보전략과 외교 패러다임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미·중 전략경쟁은 한반도의 안보딜레마를 어떻게 심화시키는가? 둘째, 북·러 조약은 동북아 세력균형과 확장억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이러한 구조적 제약 속에서 한국은 어떤 전략을 통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

2. 핵심쟁점

(1)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약화와 동맹의 불확실성

연구는 미국의 전통적 동맹체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주의(transactionalism)와 ‘조건부 동맹’ 개념으로 인해 약화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의 확장억제 신뢰성이 과거보다 불확실해지면서 한국은 동맹 의존 전략만으로는 안보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2)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의 부상

동북아 안보는 군사안보뿐 아니라 반도체, 공급망, 희토류 등 경제안보 영역과 결합되고 있다. 한국은 안보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연결된 이중의존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전략적 딜레마에 놓여 있다.

(3)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

2024년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 조약은 사실상 군사동맹에 준하는 성격을 지니며, 북한 핵능력 고도화와 러시아의 대북 지원 가능성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한반도 안보는 남북 문제를 넘어 미·중·러가 개입하는 다층적 전략경쟁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4) 한국의 전략적 선택

연구는 완전한 대미 편승, 전략적 중립, 소극적 헤징, 독자 핵무장 등의 선택지를 비교한 결과, ‘능동적 다층 헤징(active multilayer hedging)’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평가한다.

3. 핵심주장

연구의 핵심 주장은 한국이 기존의 수동적 균형외교를 넘어 ‘동맹 기반 헤징(alliance-embedded hedging)’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의 핵심축으로 유지하면서도 중국, 러시아 및 기타 국가들과 협력 공간을 확보하는 다층적 외교전략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는 5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 및 NCG 강화
- 독자적 재래식 억제력과 3축 체계 강화
- 한·미·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소다자 안보협력 확대
- 실용적 군비통제 및 위험감소 중심의 대북 접근
- 포용적 안보 개념에 기초한 다층적 외교 추진

결론적으로 연구는 한국이 미·중 경쟁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기술력, 경제력, 방산 역량을 활용해 전략적 설계자(strategic architect)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II. 조성렬 박사 (경남대학교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1. 총론: 발표문의 구조적 정합성 및 논리 체계 검토

본 발표문은 2025년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등장과 2026년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를 동북아 안보질서의 구조적 변동을 이끄는 핵심 동인으로 설정하고 있다. 필자는 냉전기 이후 역내 안정을 지탱해 온 ‘샌프란시스코 체제(허브-앤-스포크)’의 침식, 미·중 패권 경쟁의 심화, 북·러 군사 협력의 제도화를 거시적 단층선으로 규명하며 이를 아담 투즈의 ‘복합 위기’ 개념과 연계하여 설명한다.

이러한 거시 정세분석을 바탕으로 이론적 틀로서 미어샤이머의 공세적 현실주의와 코헤인·나이의 복합 상호의존론을 결합하고, 쿠이크(郭淸水)의 헤징 유형론을 한국적 맥락

에 맞춰 ‘동맹 기반 헤징(alliance-embedded hedging)’으로 변용해 대안을 도출하는 정교한 논리적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곽태환 교수님의 ‘최적의 균형 외교(OBD)’ 전략을 수용하며 한국의 독자적 외교 공간 창출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본 발표문이 채택한 이론적 프레임워크와 현실 분석 사이에는 몇 가지 내재적 긴장과 논리적 오류의 가능성이 관찰된다.

첫째는 이론적 절충주의의 함정이다. 저자는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 간의 충돌을 인위적으로 봉합하지 않고, 이를 분석적 도구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공세적 현실주의는 국제체제의 무정부성으로 인해 국가들이 ‘권력 극대화’와 ‘패권’을 추구하는 제로섬 게임을 벌인다고 상정한다. 반면 복합 상호의존론은 다층적 채널과 경제적 상호의존을 통해 군사력 이외의 정책 수단과 상생이 가능함을 역설한다. 이 두 이론의 핵심 전제는 상호 배타적이다. 따라서 이를 기계적으로 결합할 경우, 현재의 미·중 경쟁이 ‘구조적 필연에 따른 충돌 경로(현실주의)’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호의존에 의해 통제 가능한 갈등(자유주의)’ 상태인 것인지에 대한 진단에서 자기모순적 결론에 빠지게 된다.

둘째는 헤징(Hedging) 개념의 논리적 오용 가능성이다. 저자는 공식 동맹을 유지하면서 자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동맹 기반 헤징’으로 명명했다. 그러나 국제정치학에서 헤징은 특정 강대국에 편승하거나 균형을 맞추는 명확한 선택을 피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전략이다. 한국처럼 미국과 강력한 법적·군사적 ‘공식 동맹’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행위는 ‘헤징’이라기보다 ‘동맹 관리(Alliance Management)’나 ‘다변화 외교’에 가깝다. 동맹이라는 절대적 구속력을 상수로 두면서 동시에 헤징을 추구한다는 설정은 개념 정의의 범주를 이탈한 논리적 비약이다.

셋째는 사실관계 검토의 필요성이다. 발표문은 미국의 국가국방전략(NDS 2026)이 ‘조건부 동맹’과 ‘거부에 의한 억제’ 전략을 명시했으며,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를 추진할 것을 밝히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24년 6월의 북·러 조약과 2026년 5월 미·중 정상회담을 다루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분석은 실제 미국의 공식 문서 편제 및 한·미 간의 합의 사안과 일치하는지 정밀한 교차가 필요하며, 세부 논평을 통해 살펴볼도록 한다.

2. 세부 논평

가. 제3장: 안보 구조 침식 및 군비·경제 안보 분석 검토

제3장에서 필자는 미국의 NDS 2026이 ‘조건부 동맹’을 명문화했으며,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던 전략적 위성 정보 공유를 전격 중단했다고 주장한다.

팩트체크 및 정보의 신뢰성 검증: 미국의 공식 국방문서에서 동맹을 ‘조건부’로 명문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 차원의 허브-앤-스포크 동맹 체제 전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극단적 조치이다. 실질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위성정보 공유를 중단했는지 여부

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안으로, 이것이 공식적인 정책 전환인지, 아니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일회적인 압박성 조치인지 명확히 분리하여 검증해야 한다. 만약 정보 공유가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 기체 자체가 마비되므로, 필자의 주장은 다소 과장되었거나 출처의 신뢰성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통계 자료의 정합성 문제: 발표문에 제시된 <표1> ‘동북아 주요국 국방비 추이 (2020-2025)’에서 북한의 국방비를 2024년 52억 달러, 2025년 6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하였다. 북한은 국가예산 집행액의 수치(원화)만을 발표할 뿐, 공식적인 달러화 환산 국방비 통계를 공개하지 않는다. SIPRI나 IISS의 추정치 역시 환율 산정 방식과 북한의 은닉 예산에 따라 수배 이상 차이가 난다. 필자가 이를 단일한 확정 수치로 표기한 것은 통계학적 불확실성을 은폐한 오류이며,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20~30%에 달하는 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금액 자체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착시를 유발할 수 있다.

경제안보 논거의 역설적 오류: 필자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19.1%(2025년 기준)에 달해 디커플링이 어렵다고 보면서도, 동시에 한국의 첨단 반도체 기술과 방산 역량이 미·중 모두에게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심각한 논리적 역설을 내포한다. 패럴과 뉴먼의 ‘무기화된 상호의존’ 이론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중추적 기술(반도체 첨단 공정)을 가진 국가는 강압을 가할 수 있지만, 동시에 원자재(중국의 희토류 등 수입 비중 22.4%) 공급망에 묶여 있다면 그 레버리지는 상쇄된다. 즉, 한국이 가진 기술자산이 강대국을 움직일 '독보적 레버리지'가 된다는 저자의 낙관적 전망은, 중국의 요소수·희토류 통제 등 비대칭적 보복 카드 앞에서는 무력화될 수 있다는 상호의존의 취약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 제4장: 북·러 조약의 성격 및 미래 시나리오 검토

제4장은 2024년 체결된 북·러 조약 제4조의 ‘지체 없는 군사 원조’를 들어 러시아의 한반도 군사 개입이 제도화되었다고 규정한다.

법적·외교적 해석의 문제점: 북·러 조약 제4조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유엔헌장 제51조(집단적 자위권) 및 양국의 국내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즉, 북한이 ‘선제 도발’을 감행해 발생한 전쟁의 경우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할 의무는 없다. 저자는 이 조약이 ‘유사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 경로를 명시적으로 제도화’했다고 단정함으로써, 러시아가 보유한 외교적 해석의 여지와 전략적 모호성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설정된 시나리오 간의 상호 중첩성: 필자가 제시한 세 가지 미래 경로(관성적 지속, 제한적 합의, 우발적 충돌)는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 예컨대 트럼프 행정부와 북한 간의 ‘제한적 합의(경로 2)’ 시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되거나 오판이 겹쳐 ‘우발적 충돌(경로 3)’로 전개될 수 있다. 이들을 무전제적인 병렬적 시나리오로 나열한 것은 정

세의 동학을 단선적으로 파악한 결과이며, 한국이 구축해야 할 포트폴리오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다. 제5장: 결론부의 논리적 비약과 OBD 전략의 한계

목표와 수단의 괴리: 발표문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현실적 불가능성을 인정하고 ‘실용적 군비 통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공동 핵 기획)’와 ‘독자적 재래식 억제력(3축 체계) 확충’을 요구한다. 북한과의 군비 통제 협상은 본질적으로 상호 군비 감축이나 동결, 즉 신뢰 구축과 위협 경감을 전제로 한다. 우리가 미국의 핵 기획에 깊숙이 참여하고 극 초음속 미사일 등 선제타격용 킬체인 자산을 대폭 증강하면서 북한에 ‘핵 프로그램 동결 및 검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안보딜레마를 심화시킬 뿐,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낼 수 없는 수단 간의 전형적인 모순이다.

‘최적의 균형된 외교’(OBD)의 현실적 작동 불능: 곽태환 교수님의 ‘OBD 전략’과 필자의 ‘동맹 기반 해징’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러시아와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가치 중립적 유연성을 전제한다. 그러나 미·중 경쟁이 기술과 이념을 아우르는 블록화 단계로 진입한 상황에서, 당위적 수사에도 불과하고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대중 수출 규제(CHIPS Act 영향 등)에 동참하면서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파괴 없이 지속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방법론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수단이 생략된 균형론은 현실 외교에서 기회주의로 오인되어 양측 모두에게 버림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3. 정책제언: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를 위한 대안적 5대 축

본 정책제언은 발표문에 제시된 필자의 정책 대안들(NCG 현대화, 독자적 3축 체계 완비, OBD 전략 기반 소다자 다변화, 대북 군비통제, 비전통적 남북협력)을 참고로 하여, 발표문에서 드러난 논리적 공백을 보완하고 2026년의 고도화된 지정학적 환경을 반영해 토론자가 새롭게 작성한 정책제언이다.

[그림] 한국의 대외 안보·경제 전략 신(新) 패러다임



[제1축] 중견국 중심의 ‘자율성 연대’ 다자 네트워크 구축

미국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허브-앤-스포크 체제의 침식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미·중 양자택일 구조에서 벗어나 유사한 지정학적 제약을 공유하는 중견국들과의 독자적인 다자 안보·경제 연대체를 주도해야 한다.

호주, 일본, NATO 내 주요 중견국(영국, 프랑스 등)과 함께 강대국의 일방적인 공급망 무기화나 동맹 약화 압력에 공동 대응하는 ‘중견국 자율성 협의체(M-CAn)’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미국이나 중국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 않는 제3의 완충 지대를 형성함으로써, 특정 블록의 강압 조치가 발생할 경우 중견국 간의 교차 보복 및 대체 공급망 가동을 통해 비대칭적 방어력을 확보한다.

[제2축] 독자 자강력 기반의 ‘비대칭 다층 억제’ 태세 전환

미국의 확장억제 의사결정이 자국 중심주의로 경도될 가능성에 대비해, 한국 군의 자강 노선은 미국 핵 자산에 의존하는 대칭적 억제가 아닌, 북한과 주변국의 위협을 동시에 상쇄할 수 있는 비대칭 기술 집약형으로 전면 재설계되어야 한다.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통적 재래식 전력 증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저비용·고효율의 군사위성 군집 운용, AI 기반의 무인 잠수정(UUV) 및 스웜 드론(Swarm Drone) 체계, 저궤도 사이버 무기체계 확충에 국방 자원을 집중 투입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도발 시 인프라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비재래식 거부 능력을 확보하고, 독자 핵무장론이 초래할 국제적 제재 비용을 회피하면서도 실질적인 대북·대주변국 억제 레버리지를 극대화한다.

[제3축] 공급망 리쇼어링의 안보화와 ‘기술 민족주의’ 외교 전략

경제 안보가 전통 안보를 대체하는 시대에 한국의 반도체·배터리 기술은 단순한 무역 자산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외교적 방패이다. 강대국의 압박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핵심 선단 공정의 자국 내 통제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해외로 이전되는 첨단 파운드리 및 생산 설비에 대해 ‘안보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핵심 지식재산권과 생산 통제권을 한국 본사가 독점하도록 법제화한다. 동시에 희토류 및 중간재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동남아·중남미 중견국들과의 ‘자원-기술 교환 협정’(가칭)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미국에는 ‘한국의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면 미국의 안보 공급망도 와해된다’는 인식을 이식하고, 중국에는 ‘비대칭 보복 감행 시 첨단 중간재 공급이 완전히 차단된다’는 경고를 보냄으로써 기술 독점에 기반한 외교적 자율성을 고착한다.

[제4축] 북·러 밀착 대응을 위한 ‘한반도 탈동조 외교’ 전개

북-러 조약에 따른 군사적 결탁을 차단하기 위해선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적대시하는 진영 외교를 지양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틈새를 공략하는 전략적 탈공조 정책이 필요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한 국제 규범적 비판 기조는 유지하되, 극동 러시아 지역의 자원 개발 및 북극항로 인프라 구축 등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려는 러시아 고유의 전략적 이익을 자극하는 경제 협력 채널을 수면 아래서 재가동한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ICBM, 정찰위성 등)을 무제한 이전하는 행위가 한-러 관계의 영구적 파탄을 초래하여 자신들의 극동 전략에 손해가 된다는 비용 계산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북-러 동맹의 내부 결속력을 약화시킨다.

[제5축] 다자 주도의 ‘한반도 위기관리 및 신뢰구축 플랫폼(M-KCCP)’ 제안

남북 간의 직접적 통신선 복원이나 비현실적인 포용적 안보 접근 대신, 다자 기구를 매개로 북한의 행동을 규제하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유엔 환경계획(UNEP) 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권위 있는 국제기구가 주도하고 한국,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접경지대 재난·방사능 상시 감시기구’ 설립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북한의 핵 교리 공세화로 인한 우발적 군사충돌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비정치적 외교적 명분을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북한을 다자간 위기관리 틀 내로 끌어들이고 한반도 안보 환경의 실질적 불예측성을 낮추는 기제로 활용한다. //끝//

III. 강석승 박사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국민대 글로벌·평화통일대학원 특임교수)

0 발제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우리나라가 위치한 동북아의 안보질서에 단순한 정책 전환의 차원을 넘어선 구조적 충격을 가하고 있음. 특히 이란과의 분쟁, 중국과의 패권 경쟁 등은 우리나라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0 발제자께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학술적 성취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역동성을 온전히 포착하는데는 몇 가지 공백이 관찰되기 때문에 1)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 간의 긴장을 인위적으로 봉합하지 않고 분석틀 내에 의도적으로 내재화하며 2)군사안보와 경제안보를 분리된 영역으로 취급하던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여 ‘복합지정학’이라는 통합적 분석틀을 제시하며 3) 2026년 현재 시점의 전략환경 변화를 연구의 시의성 속에 통합하는 차별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이런 접근 방법에 대해 필자는 매우 신선하고도 창의적이라고 평가하고 싶음.

0 특히 발제자께서는 북-러 군사협력의 심화와 관련하여 미국의 전략적 재조정이 교차하는 작금의 시점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1) 관리된 긴장상태의 관성적 지속 2) 미-북 간의 제한적 합의와 거래적 외교 3) 우발적 충돌에 의한 군사적 확전 등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음.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확정적 미래로 단정짓기는 불가능하다고 전제

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특정 단일 시나리오에 전략적 자산을 투입하는 도박을 피해야 하며, 복수의 경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입체적인 안보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것을 역설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발제자에게서는 1) 한미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 2) 독자적 재래식 억제역량의 단계적 확충 3) 소다자 안보협력네트워크의 전략적 확장 4) 실용적 대북 군비통제접근 5) 포용적 안보개념의 확산 등을 정책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음.

본 토론자는 발제자의 위와 같은 접근 방법과 정세 평가, 그리고 정책 대안 제시 등에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질문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지금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미국과 이스라엘의 對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분쟁 등의 국제법적 성격 등을 감안할 때, 동북아 안보체제의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중국의 대대만 침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견하고 있는 지?

2) 그동안 설왕설래(說往說來)로만 그쳤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간의 정상회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시기와 장소에 대해...

3) 이재명 정부의 대미·대중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큰 성과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종전의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차원을 넘어선 현실적 대안(代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혹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묘책(妙策)이 있는지? (끝)

IV. 박종수 박사(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1. 총론

○ 이상수 박사의 발제문은 최근 동북아 국제질서의 급격한 변동을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하고 한국의 대응전략을 제시한 시의성 높은 연구임.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MAGA 정책,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라는 세 가지 핵심 변수를 상호 연계된 복합위기(polycrisis)로 규정하고, 이를 한반도 안보에 투영해 분석한 점은 본 연구의 중요한 학문적 기여로 평가됨.

본 발제문은 무엇보다 기존 연구들이 개별 현상분석에 집중했던 한계를 넘어 군사안보, 경제안보, 공급망, 기술패권 경쟁을 하나의 통합된 전략 환경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보여줌. 또한 공세적 현실주의와 복합 상호의존론을 결합해 한국의 전략적 선택공간을 설명하려는 접근은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이분법적 대립을 초월하는 의미 있는 시도임.

특히 필자가 제시한 ‘동맹기반헤징(Alliance-Embedded Hedging)’ 및 ‘최적의 균형된 외교(Optimal Balanced Diplomacy)’ 개념은 한국 외교가 직면한 실존적 고민에 대한 현실주의적 해법임. 기존 헤징론이 동남아 국가들의 전략을 설명하는 데 적합했다면, 한국처럼 미국과의 공식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 높은 경제적 상호의존을 가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이론적 확장을 시도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함.

다만 본 발제문은 몇 가지 점에서 추가 보완이 필요함. 첫째, 미래 전망이 상당 부분이 특정 정치적 시나리오를 전제로 구성되어 있어 구조적 분석과 정책적 예측이 혼재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북한 변수에 대한 분석이 주로 군사적 위협 중심으로 전개되면서 북한 내부의 정치·경제 상황, 그리고 대외정책 변화가 안보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루었음. 셋째, 한국의 전략적 자율성 확보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국내 정치적 제약과 사회적 비용에 대한 논의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임.

2. 세부 논평

(1) 복합위기(polycrisis) 개념 적용의 타당성과 한계

○ 아담 투즈의 복합 위기 개념을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에 적용한 것은 군사·경제·기술적 변수들이 상호 증폭 효과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는 연구임. 대만해협 위기, 북·러 군사협력, 공급망 재편, 미·중 기술경쟁은 개별 사안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결되어 있어서 단일 변수 중심의 분석으로는 현재의 안보환경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필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함.

그러나 복합 위기 개념은 설명력은 높지만 예측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변수 간 인과관계의 강도와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동맹 기반 헤징’ 및 ‘최적 균형 외교’ 개념에 대한 검토

본 연구의 핵심적 기여는 ‘동맹 기반 헤징’이라는 개념적 확장에 있다. 미국과 군사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경제협력을 지속해야 하는 이중적 구조의 현실을 고려할 때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전략적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헤징 전략은 상당한 현실성을 가짐.

그러나 헤징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이 한국의 자율적 외교공간을 일정 수준 인정해야 하고, 둘째, 중국 역시 한국의 동맹 구조를 수용해야 함. 따라서 ‘동맹 기반 헤징’은 한국이 원하는 전략 이라기 보다 강대국의 허용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으로써 이를 보장한다면 ‘최적 균형 외교’를 담보할 수 있음

(3) 북·러 군사협력 분석에 대한 평가

○ 러우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간 관계는 군사협력을 넘어서 전방적으로 심화되었으며 종전이후에도 적어도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상황에서는 북러간 군사적 밀착관계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음

○ 러북 간 밀착은 러우 전쟁 이후 더욱 견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됨.

첫째로, 푸틴과 김정은은 모두 1990년대 고난의 행군을 경험했고 지옥같은 서방의 제재를 감내하는 동병상련의 입장에서 아우루스 방탄차 (7·27·1953, 1,958억원 상당)까지 선물할 정도의 브로맨스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둘째로, 북한은 경제적으로도 최근 96억 4천만~122억 5천만 달러(2025년도 북한 무역총액 32억 달러의 3~5배)수익을 러시아로부터 확보하고 있음. 또한 북한의 2025년 1~3분기 야간 조도지표가 2021년의 7배로 호전된 것은 상당 부분 러시아의 에너지

지원에 기인함. 북한은 2024.6월 푸틴의 방북을 계기로 노동력 12만명을 러시아 송출에 합의했으며, 이를 위해 북한의 제9차당대회때 김정관 국방상의 건설상 전직(부총리급 격상) 및 박훈 건설상 추가임명이 단행됐고, 이미 2024년 6월 신조약 체결 때 5개항(14~18조)에 걸쳐 사법제도 교류협력문제를 명시했음.

셋째로, 군사적으로 2000년 2월 개정조약 2조(즉각접촉)을 2024년6월 신조약 4조(군사접촉)로 구체화하고 러우전쟁 파병(쿠르스크 국경 1만명, 공병 1,000여명) 및 무기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 타타르스탄 엘라부가 드론공장에 북한 노동력 파견(1만2천명) 및 핵원자로2기를 적재한 라선행 러시아 그림자 선박운행중(2024.12.22.~24) 침몰사고 등 정황도 포착됨

(4) 일본 재무장에 대한 분석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반격능력 보유 선언, 방산 수출 확대는 전후 일본 안보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며,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분석은 개관적임.

○ 일본의 군사력 증강 및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북·중·러 북방3국의 군사력 증강과 군사협력 강화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으며, 한반도가 한·미·일 대 북·중·러의 충돌지역으로 비화될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향후 한국의 대일정책은 군사영역과 여타 비군사영역을 확실히 분리해 관리하는 전략적 관계설정이 바람직함

3. 정책 제안

필자가 제시한 능동적 다층해징 중심의 다섯 가지 정책 대안에 대한 보완적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첫째, 전략적 자율성과 동맹 강화의 병행 추진

전략적 자율성은 단기적으로 동맹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동맹 내 발언권 확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한국은 방위비 분담이나 국방역량 증강을 단순한 부담으로 인식하기보다 동맹 내 협상력을 높이는 자산으로 활용함. 장기적으로는 전시작전권 환수 등 자주국방을 통해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혹한 국제질서에 편승해야함

둘째, 경제안보 역량의 국가전략화

향후 안보경쟁의 핵심은 군사력뿐 아니라 기술력과 공급망 통제력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음.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방위산업은 단순한 산업정책의 영역이 아니라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 자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중견국(중강국) 네트워크 외교 확대

G-0의 다극체제(또는 C-5 권력 블록의 비대칭적 다극체제)의 국제질서 변화에 부응하면서 한국의 독자적 외교공간을 확대해야 한다. 러우전쟁을 계기로 한반도가 동서서점, 서세동점 및 북세남점의 충돌지역으로 비화되지않도록 특정진영 편승이 아닌 전략적 다변화의 실용외교 저변을 확대해야함

넷째, 대북정책의 4대국 평화활용론 등 다중트랙 구축

한반도의 지정학적·지경학적·지전략적 여건을 감안해 미·일·중·러 주변강국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소위 '4대국 평화활용론'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적대적 두국가론을 공식화하고 헌법에 명시한 상황에서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적 소통체계 복원 및 다중트랙 구축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최우선적이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다섯째, 국내적 전략 합의 형성

어떠한 외교안보 전략도 국내적 합의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정권 교체에 따라 대외전략이 바뀌는 현상은 한국 외교안보정책의 구조적 취약성이다. 따라서 초당적 국가전략 논의기구를 활성화해 중장기 안보전략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4. 결론

○ 이상수 박사의 발제문은 동북아 안보질서가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국의 새로운 생존전략을 모색한 시의적절한 연구임. 특히 '동맹 기반 헤징'과 '능동적 다층 헤징'이라는 개념은 한국 외교가 직면한 현실적 딜레마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향후 한국의 과제는 동맹과 자율성, 안보와 경제, 억제와 협력이라는 상충하는 가치들에 대한 이분법적 선택이 아니라, 이를 균형 있게 관리하는 전략적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음. 결국 전략적 자율성이란 고립이 아니라 선택지를 확대하는 능력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외교안보정책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됨. /끝/.

V. 홍현익 박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

1. 총평

-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질서 변화를 트럼프 행정부의 동북아 전략 변화 (샌프란시스코 체제의 균열), 미·중 패권 경쟁, 북·러 군사협력의 제도화 등 세 가지 거시적 변동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전략과 방향을 제시한 수준 높은 정책 보고서로 평가함.
- 저명한 많은 학자들의 이론을 검토하고 곽태환 교수님의 '최적의 균형된 외교' 전략의 합의를 소화해 한국의 합리적인 외교안보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으므로 학자와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함.

많은 논문을 분석·소화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학문적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2. 구체적 논평

- 1쪽: 이란 전쟁으로 인해 지역에서 미국의 전력에 공백이 생긴 것을 이용해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현상 변경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임.

- 3쪽: 한국이 자발적으로 국방비를 늘리고 한·미 협상 팩트 시트 상 사실상의 방위비 증액이 엿보이는 등 한국이 성의를 보임으로써 미국의 국방비나 방위비 증액 요구는 수면 이하로 가라앉은 모습임. 또 주한 미군의 일정 수준 감축이 최악의 시나리오이고 실존적 선택이라는 것은 과도한 우려로 여겨짐.

북·러 군사협력 강화로 발생한 러시아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가를 부정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으로 여겨짐.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 개선과 협력을 바라고 있고,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안정에 기여하는 균형자나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듯함.

- 13-14쪽: 4.3 한반도 미래 시나리오는 제4장 북·러 군사협력의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므로 독립된 장으로 편성할 것을 권고함.

3. 정책 대안

-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를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공동 핵 기획 플랫폼'으로 진화시키는 노력은 매우 바람직함. 이에 더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북한의 핵 공격을 실질적으로 억지하려면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북한의 공격 위협 증가에 연동한 단계적인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한·미 간에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한국의 독자적 재래식 억제 역량을 확충하려면 한국군의 정찰, 감시, 정보 및 작전 기획과 지휘 능력을 제고하면서 전작권을 환수하되, 작전지휘구조를 미일동맹처럼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병렬형으로 독립시킨 뒤 양자를 긴밀히 협력하는 작전협력분부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필자가 동맹의 가변성에 대비해 리스크 분산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호주, 영국 등 가치공유국들과의 다자안보 협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나아가 가치 비공유국들인 러시아를 설득하고 미국, 중국, 북한을 참여시키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을 구축해 안보 교류 및 협력을 도모하고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외교적으로는 중국 및 러시아는 물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관계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함. 특히 필자가 제시한 포용적 안보개념의 확산을 남북 협력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을 포함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으로 발전시키는 것도 동맹의 가변성에 대비하는 보완책이 될 수 있음.
- 실용적 군비 통제 과정에서 다층적 검증체계 수립이 바람직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엄격한 검증에 치중해 협상 자체를 망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엄격한 검증을

압박하기보다 북·일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진전시키고 상호 안보 관점에서 북한의 입장도 고려해 주는 것이 궁극적인 비핵화를 성공시킬 수 있을 것임. -끝-

VI. 최용환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1. 총론

-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질적 변화에 대한 통찰력 있는 분석
 - 특히 소극적 해징을 탈피하여 능동적 다층 해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는 적극적으로 찬성함
 - 한미 확장억제의 실질적 현대화, 독자적 재래식 억제 역량의 단계적 확충, 소다자 안보협력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장, 실용적 군비통제 접근 등 정책제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도 동의함

2. 세부 논평

- 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해징 전략에 기본적으로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논점이 보완될 필요
 - 첫째, 미국의 동맹관이 위협의 공유가 아닌 이익 기반 동맹으로 변화하였다는 점에서 거래적 동맹 관계를 관리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
 - ➔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이해를 관철시키거나 최소한 최악의 경우를 회피하기 위한 대미 정책적 레버리지 확보가 긴요
 - ➔ 동맹 간에도 이익의 균형과 거래가 중요해진 상황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국익을 조화시켜 우리의 이해에 부합하게 동맹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
 - cf. 최근 나타나는 대서양 동맹의 균열은 서유럽이 미국에 안보 무임승차를 해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호혜적 이익 창출을 위한 능력 부재에 기인
 - 둘째, 미중 전략경쟁의 구조화/전면화 추세를 고려할 때,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리와 연루의 위험 증가 우려에 대한 고려가 긴요
 - ➔ 최근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들이 대치한 사건, 주한미군 사령관의 거둬된 정치적 발언 등을 고려할 때, 한미 핵잠 협력 역시 미국은 대중 억제에 있어 한국의 역할 증대와 연관시켜 인식하고 있을 것
 - ➔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 분쟁 연루 가능성 최소화를 위해서는 ‘전략적 자율성’ 제고가 긴요
 - ➔ 전략적 자율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구조적 이익과 관계적 이익을 구분한 유연하고 균형 잡힌 외교가 중요함. 즉, 구조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유지하되, 관계적 이익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해징)이 유효할 것

- 셋째, 확장억제 강화 필요성에 충분히 동의하지만, 현재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억제력 강화는 필요조건이나 충분조건이 될 수 없을 것임
 - ➔ 그 이유는 i) 미국과 북한 모두 선제 핵사용 유인이 강한 상황, ii) 취약한 위기확산 통제. 즉, 한반도는 북미 모두 선제 핵사용 유인이 강하고, 위기 통제력이 취약한 이중적 난관에 봉착한 상황이어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안정-불안정 역설이 작동하지 않을 우려
 - ➔ 특히 북러 신조약 체결로 인해 한반도는 미중러라는 세계 3대 핵 강국과 동맹 조약으로 묶여 있는 상태
-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의 확장 기조에 동의하지만, 소다자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 범위에 대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
 - ➔ QUAD, AUKUS 등 가치 공유국과 다자안보협력은 당연히 필요
 - ➔ 여기에 더하여 한중일 정상회의와 같은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음
 - ➔ 왜냐하면 미중 전략경쟁 국면에서 가치기반 소다자 네트워크만을 확대한다면 우리는 한 진영에 경사될 것이고, 이는 우리의 외교적 선택지를 제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임

3. 정책제언³⁶

- 불확실성의 시대 대처를 위한 자강에 기초한 동맹전략으로의 전환
 - ➔ 국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산은 자강력
 - ➔ 한미동맹에 있어서도 조선,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미 투자 등 우리가 가진 자산을 기초로 상호이익 기반의 동맹 관리 전략 구체화
- 구조적 이익과 관계적 이익을 구분한 실용외교
 - ➔ 자유무역, 항행의 자유 등 개방형 통상국가로서 한국의 구조적 이익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되,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이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 이른바 전략적 명료성과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분법을 탈피할 필요
 - ➔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제고에 따른 연루 위험 최소화와 미국 확장억제 신뢰성 유지 간 균형전략. 한국 방위에 있어 한국의 역할 제고 및 전작권 전환 + 한국의 주도적 책임(primary responsibility)과 미국의 결정적이지만 제한적 지원(critical but more limited support)의 내용 구체화 등 한미 간 역할 분담에 대한 명확한 합의 도출과 이행
- 특정 국가를 배제하거나 목표하지 않는 포용적 대외전략

³⁶ 이하 내용은 최용환, “한반도 평화공존과 한미동맹” (한국국제정치학회 주최 학술회의 발표 예정. 2026. 6. 24)의 내용 일부를 정리한 것임

- 미중 전략경쟁에서 양자택일적 선택에 내몰리지 않기 위해서는 특정국가를 목표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 대외전략이 긴요
 - 북한 외교가 집중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중/한러관계 관리를 위한 우리의 전략이 긴요
 - 강대국 경쟁의 경계를 관통하는 다양한 협력이 필요 (중국, 러시아 이외에 최근 북한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 베트남, 라오스,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 몽골/폴란드 등 남북 모두에 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반도 이슈에서 일정한 역할 담당을 희망하는 국가들/중앙아시아 고려인 등과 같은 Korean Diaspora 등에 대한 포괄적/종합적 전략이 필요)
- 대북억제를 넘어 한반도 평화전환을 위한 한미협력
 - 미국 대외정책에서 한반도 문제의 우선 순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평화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제시하고 미국 등 핵심 주변국들의 참여를 견인할 필요
 - 이와 관련하여 동맹현대화 논의가 냉전적 진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지역안정과 평화 기여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도록 메시지를 관리
 - 남북협상의 주체이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위상과 역할 제고, 전작권 전환, DMZ 평화적 활용을 위한 권한 확보 등 독자적 남북관계 관리 주체로서 위상 확보
 - 보다 미래지향적 대응한 호혜적 한미동맹으로의 발전.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의 이해를 발전 /끝/

<제55회 전문가 정책포럼 참석자 프로필 소개>

총괄기획/진행: 곽태환(郭台煥) 박사

한국 외국어대 학사 (1961), 미국 Clark University 국제 관계학 석사(1963) 및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 관계학 박사학위(1969). 미국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1969-1999); 경남대 교수/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95-1999); 통일연구원 원장(1999-2000),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상임위원 [정책외교 분과위원회 (2001-2005)]. (전) 통일부정책자문위원, (전)전국 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협의회 회장, Global Peace Foundation(GPF)이 수여하는 글로벌 혁신적 학술 평화상 수상(2012.12.1). 경남대학교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6.4), 통일뉴스 특별 공로상 수상(2021). 한국 외국어 대학교 HUFs Award (해외 부분)수상(2025.4.18)

현재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전문가 정책포럼 기획 주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 석좌교수, Eastern Kentucky대 명예교수, 제19-221기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제23기 통일교육위원 LA협의회 상임고문, 미주민주참여 포럼(KAPAC) 상임고문, 한반도 중립화 통일 협의회 이사장(2010-2021) 현재 명예 이사장, 한국 외국어 대학교 남 가주 동문회 이사장(2022), 현 통일전략연구 협의회 (LA) 회장 등. 37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자이며 600편 이상의 칼럼, 시론, 논평 등 학술논문을 남북한관계, 한반도 통일과 4강의 對한반도 정책에 관하여 출판하였음. **주요 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를 것인가?』(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구상』(1999). 공저: 『한반도 문제 해법: 새로운 모색』(한국학술정보, 2024),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의 모색』(매봉, 2023), 『한반도평화체제의 모색』(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 『북한의 협상 전략과 남북한관계』(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7)와 번역서로는 K.J Holsti, *International Politics: A Framework for Analysis*, 4th ed. 國際政治學: 分析의 틀(博英社, 1990).

주요 영문 책 Editor & Co-editor: *In Search of Peace in Korea and Northeast Asia* (Routledge, forthcoming, 2026);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England,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England, 2010); *North Korea's Foreign Policy under Kim Jong Il: New Perspectives* (Ashgate, England, 2009); *North Korea's Second Nuclear Crisis and Northeast Asia Security* (Ashgate, England, 2007)등 통일뉴스, LA 중앙일보, 브레이크 뉴스(Break News) 칼럼리스트.

연락처: thkwak38@hotmail.com; 미국 +1-310-729-8383(Kakao talk)

발표자: 이상수 박사 (제주도평화연구소 초빙연구위원)

전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핵/WMD대응 연구센터 책임연구원

학력: 고려대 영어영문학 학사(1989);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석사(1994);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치학박사(2003)

경력: 한화경제연구원 특수연구센터 주임연구원(1994-1998); 고려대 평화연구소 연구교수(2005-2006);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핵/WMD대응연구센터 책임연구원(2006-2024);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정치학과 방문학자(2013.-2014),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GSIS)의

래 교수(2014.9-12); US Naval War College 방문 교수(2018.9.1.-2019.3.1.)

주요 논문

- *Sangsoo Lee. *Evolution of Jangmadang and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Focus on Recalibrating South Korea's Economic Policy toward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23(1), 2018. (KCI)
- *Sangsoo Lee. *The ROK's Past Administration's Security View against the DPRK and Policy Direction for the Future*. *Social Science Review*, 47(1), 2016. (KCI)
- *Sangsoo Lee. *The DPRK's Return to Dialogue," the US Perception, and the ROK's Trustpolitik*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9(2), 2014. (KCI)
- *Sangsoo Lee. *Paradox of Neoliberalism: Arab Spring's Implications on North Korea* (*North Korean Review*, Volume 8(1), 2012. (SCI)
- *Sangsoo Lee. *A New Option for Development of Human Security in East Asia: Reforming the ASEAN Regional Forum*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3(2), 2012. (KCI)
- *Sangsoo Lee. *The UN's Human Rights Policy towards North Korea: The Limit of the Neoliberal Approach* (*The Journal of Peace Studies*, 13(2), 2012. (KCI)
- *Sangsoo Lee. *Universalism VS. Relativism: US Human Rights Policies towards China and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Security Affairs*, 13(1), 2008. (KCI)
- *Sangsoo Lee. *Japan's Revision of the Peace Constitu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Peace Studies* 14(2) 2006. (KCI)
- *Sangsoo Lee. *Anti-Corruption system of the Singapore: Lee Kwan Yews strategy on corruption*. *Southeast Asian Review*, 16(2), 2006. (KCI) 등 다수.

주요 저서

이광요의 국가경영리더십, 한국학술정보주, 2005

동아시아 공동체의 설립과 평화구축(공동저술), 동북아 역사재단, 2010. 등

연락처:010-4200-4328, e-mail: david1@daum.net

토론자 프로필 (가나다 순)

1. 강석승 박사(21세기 안보전략연구원 원장)

1955년, 충남 청양 출생

행정학박사(1992, 인하대)

통일부 연구개발과장, 정세분석팀장 등(1985-200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운영위원, 운영위원회 간사(2015-2017)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2009-2021)

인천대 정책대학원 겸임교수(2017-2021)

서울교육대학교 외래교수(2015-2018)

국방FM '북한의 오늘' 진행(2011-2018)

병무청 자체평가위원회 기획지원분과위원장(2020-현재)

월간 '군사저널' 편집위원장(2010-현재)

남북통일연구소 소장(2020-현재)

남북장애인교류협회 회장(2021-현재)
21세기안보전략연구원 원장(2017-현재)

(주요 저서)

0 북한학개론(법문사), 방위년감(국제문제연구소), 북한학대사전(북한연구소), 북한총람(북한연구소), 바이칼부대의 말치크(도서출판 해돋이), 북핵판도라X파일(동서문화사) 외 다수

2. 박종수 박사 (전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학 력>

- 서강대학교(정치외교 학사)
- 영국 런던대학교(러시아학 수학)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경제학 석사·박사)

<주요경력>

- 국회 사단법인 '유라시아21' 부이사장(현)
- 한반도평화연구원(KPI) 연구위원(현)
-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전)
-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공사(전)
-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전)
-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 초빙교수(전)
- 고려대학교 러시아CIS연구소 HK사업 연구위원(전)
- 중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조교수(전)
-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전)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및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위원(전)

<주요저서>

- 러시아와 한국-잃어버린 백년의 기억을 찾아(백의, 2001년)
- G-20국가의 인재개발(공저, 2010년)
- 21세기 북한과 러시아-신화,비화,진화(오름, 2012년, 간행물윤리위 우수저작 당선)
- 동아시아 영토분쟁과 국제협력(공저 디딤터, 2014년)
- 북방에서 길을 찾다(총괄집필, 디딤터, 2017년)
- 런치핀 코리아(공저,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2020년)
- 현대 북러관계의 이해-후견관계에서 동반관계로의 전환모색(명인문화사, 2021년)

연락처: 010-3857-9582, gepi365@gmail.com

3. 이상환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학력: 미시간 주립대학교(Michigan State University) 정치학박사(Ph.D.) / 미시간 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M.A.) /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B.A.)-

현재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교육부 대학통폐합심사위원,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모의평가 이의심사위원장 등

경력: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한국정치정보학회 회장/한국의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 대학원장/연구산협력단장/학생복지처장/글로벌정치연구소장/외무고시반 지도교수 등
 미시간 주립대학교 아시아연구센터 폴브라이트방문학자(Fulbright Visiting Scholar)
 한국연구재단 정치학분야 RB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시티즌십 프로그램 사업
 주관교수제24회 세계모의유엔대회(Harvard-HUFS World MUN) 주관교수/대통령
 외교안보자문위원/통일부 정책자문위원/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민주
 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국립외교원 설립 추진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학술지
 Korea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편집장(Editor-in-chief) 역임, 등-

주요 저서/논문: “Post COVID-19 시대의 국제정치: 탈세계화, 디지털화 그리고 신 냉전 질서의 도래” [정치정보연구] 23-3 (2020). “Trilateral Trade and Taking a Side Between the U.S. and China”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49-1 (2020), The Korea Institute for Defense Analyses (Seoul, Republic of Korea). 외 국. 영문 연구논문 110여 편. [국제관계개론], 서울: 박영사(2022). [글로벌 공공외교 기관과 활동], 서울: HUINE(2022). [국제정치경제: 시각과 쟁점], 서울: 박영사(2021). Issues and Perspective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Korean Association of International Studies, HUINE(2021) 외 국. 영문 저 역서 40여 권.-

연락처: leepol@hufs.ac.kr / 010-7525-73232

4. 조성렬 박사(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전 오사카 총영사)

주요 학력: 서울공대 화학공학과 졸업, 성균관대 대학원 정치외교학 석사 및 박사, 도쿄 대학 대학원 종합연구과, 게이오대학 법학부 및 중국외교학원 방문학자

주요 경력: 현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교수. 전 주 오사카 총영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자문위원. 전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전 북한연구학회 회장
 주요 저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국가전략: DIME 분석과 삼별 구상』,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 포괄적 안보-안보 교환론』, 『닉슨행정부 시기 주한미군 감축 협상』, 『전략공간의 국제정치: 핵·우주·사이버 군비경쟁과 국가안보』, 『뉴 한반도 비전: 비핵 평화와 통일의 길』,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주한미군: 역사·쟁점·전망』, 『정치대국 일본: 일본의 정계개편과 21세기 국가전략』 등

연락처: insscsr@naver.com, 010- 7733-3286

5. 최용환 박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 부원장)

학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학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석사, 정치학)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박사, 정치학)

경력: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역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역임
 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 부원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기획위 간사);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원;
 기타 서강대,아주대,충남대,경기대,동국대 등에서 시간강사(2002-2021)
 (담당과목:북한정치 및 대외관계,남북관계,국제관계 등)

주요 연구실적:

- 박사학위논문-논문명:“북한의 대미 비대칭 억지. 강제 전략 -핵과 미사일 사례를 중심으로”-서강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2003년 8월
- 저서-조응래 외 5인 공저, **DMZ의 미래**(서울:한울아카데미,2013)
- 정덕구 외,25인 공저, **한국의 외교안보 퍼즐**(서울:나남,2013)
- 정덕구 외,26인 공저,**기रो에 선 북중관계**(서울:중앙 books,2013)
- 최용환, **한국의 대북정책과 지자체의 역할**(서울:한울 아카데미,2015)
- 고성준 편,**통일한국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서울:오름,2016)
- 신한대 탈분단경계문화연구원 편(최완규 외 10인 공저), **경계에서 분단을 다시보다**
(서울:울력,2018)
- 이희옥·강수정 편(차태서 외 21인 공저), **전환기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재구성**
(서울:선인,2020)
- 대전대 DMZ연구원 편(김정완 외 8인 공저), **DMZ평화와 가치** (서울:윤성사,2020)

- **주요 논문:** “한국의 통일정책 평가와 과제,” **신아세아** (신아시아연구소),제17권 4호 (2010)
- “북핵위기 성격변화의 함의와 과제,” **내나라**, 제25권 (2016년 11월).
- “북한의 시장화와 국가성격변화,” **현대북한연구**,제20권 3호 (2017).
- “DMZ평화시대 조성을 위한 실천과제,”**접경지역통일연구**,제2권 2호 (2018년 겨울)
 등 다수

연락처:직장)02-6191-1058휴대전화)010-7414-7701
 E-mail: yonghwan@inss.re.kr;neoregime@gmail.com

6. 홍현익 박사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사무총장/전 국립외교원 원장)

학력: Panthéon-Sorbonne대학 (Paris I 대학) 국제정치학 박사(1996.3)

경력: 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국방부 (내란 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 역임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역임;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 위원장 역임
 국립외교원 원장 역임; 한중관계미래발전위원회 집행위원장 역임
 세종연구소 안보정책실장 역임; 한국정치학회 부회장 역임
 청와대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역임; 합참 자문위원 역임;의회외교활동자문위원 역임
 미 Duke대 객원연구위원 역임; 통일부 남북관계 발전위원회 위원 역임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역임; 민주평통 상임위원 역임

주요 논문/저서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미국, 중국, 인도의 대외전략: 전략 기조와 정책, 한국의 대외 국가전략에 대한 함의』 (2024. 11)

『북한의 핵 위협과 한국의 안보 및 외교전략』 (2024.3)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의 국가전략 환경 변화와 정책 제언』 (2023. 11)

『탈냉전기 정부별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 (2022)

『미 바이든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2021)

『트럼프 시대 미·중·러 3각관계와 한국의 대외전략』 (2020)

『21세기 대한민국의 한반도대전략: 북한문제 해결과 평화 구축 및 통일전략』 (2012)

『북한의 핵 도발·협상 요인 연구: 사례분석의 함의와 향후 북핵정책 방향』 (2018)

“대박통일을 위한 대북정책 및 국제 협력방안: 독일과 예멘 사례”(2015) 등 다수

연락처: 메일주소:hyunik@unesco.or.kr;hyunik@sejong.org 전화: 010-2580-7536

Special Note: 제55회 전문가 정책포럼에서 밝힌 견해와 내용은 포럼 참석자들의 개인 견해이며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찾아오는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하이투자증권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역 (3번출구) 문의: 02-3448-8500



연락처: 한반도 미래전략연구원 전문가 정책포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66, IM 증권 빌딩 15층, 5호선, 9호선, 여의도 역 (3번출구), 한국글로벌피스재단. 사무실: 전화번호: 02-3448-8500; 070-0505-3803(직통); Fax:02-325-8509.

총괄기획: 박태환 교수 카카오 토크 +1-310-729-8383. Email: thkwak38@hotmail.com

사무국장: 김한솔 국장 (사무실) 070-5050-3838; Mobile:010-5122-2439 Email: hskim@globalpeace.org

담당자: 기성훈 팀장 Mobile:010-6554-6394. Email: sunghoon@globalpeace.org